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 KINU 정책연구시리즈 23-04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재영·홍민·현승수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연구책임자 : 이재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홍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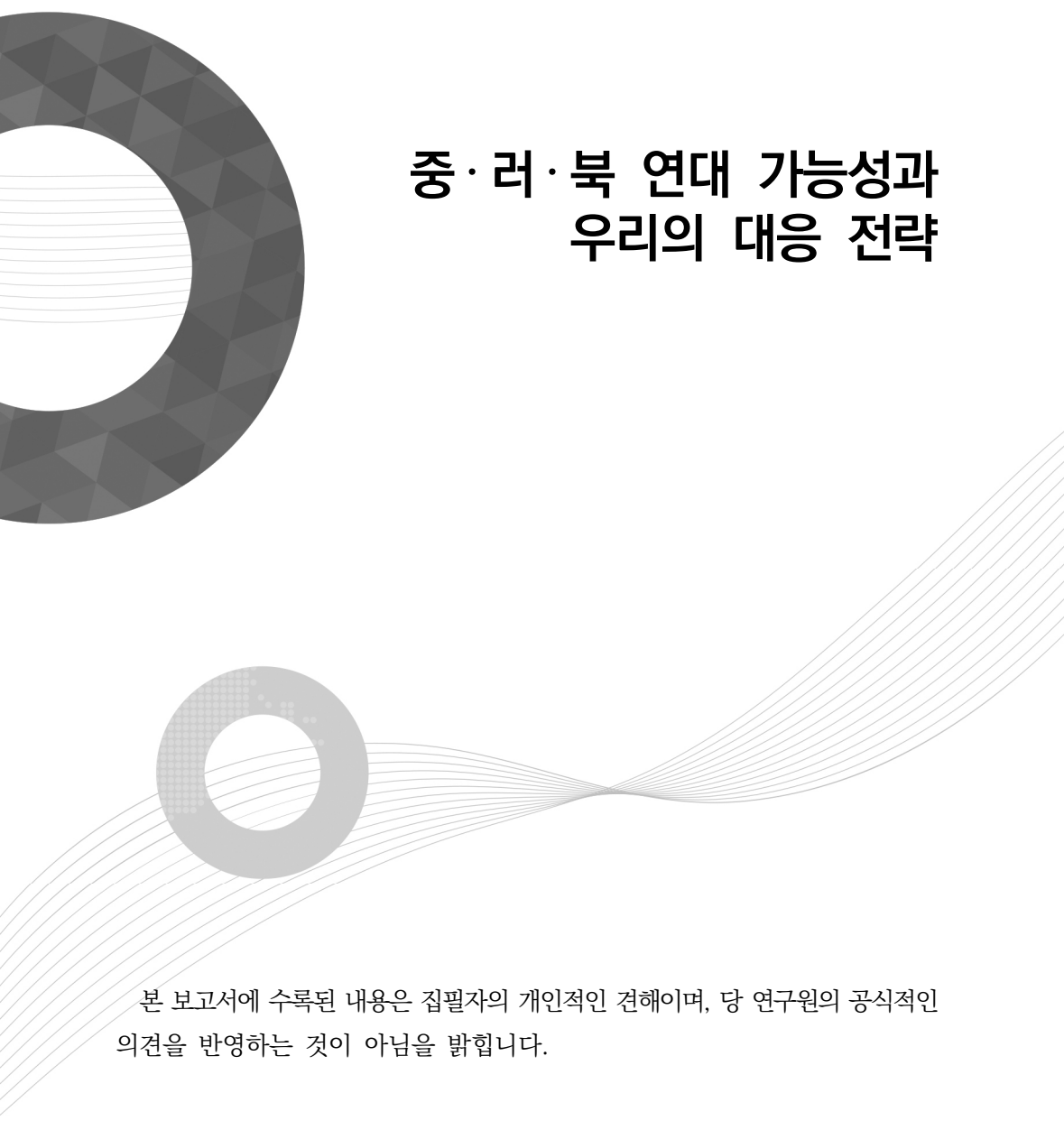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KINU 정책연구시리즈 23-04

발행일	2024년 1월 22일
저자	이재영, 홍민, 현승수
발행인	김천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국제전략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 (02-2275-6894)
인쇄처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I S B N	979-11-6589-165-7 93340
가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2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례

요약	9
I. 서론(이재영)	11
II. 중·러·북 연대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이재영)	21
1. 중·러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 대국 외교	23
2. 중·북 관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한반도 주변국 외교	32
3. 중·러·북 연대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39
III. 중·러·북 연대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전략(현승수)	47
1.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49
2.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	61
3. 중·러·북 연대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	74
IV. 중·러·북 연대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전략(홍민)	81
1. 북한의 대중국 관계에 대한 입장	83
2. 북한의 대러시아 관계에 대한 인식과 대응	94
3. 중·러·북 연대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113

V. 결론: 중·러·북 연대 전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	121
1. 중·러·북 연대 차단을 위한 한국의 대중국 전략(이재영)	126
2. 중·러·북 연대 차단을 위한 한국의 대러시아 전략(현승수)	130
3. 중·러·북 연대 차단을 위한 한국의 대북 전략과 대중국/러시아 외교(홍민)	131
참고문헌	133
최근 발간자료 안내	137



표
차례

〈표I-1〉 중·러·북의 삼국 연대에 대한 인식과 전략 비교 15

〈그림II-1〉 2023년 칭화대 여론조사 “중국인의 국제안보관(中国人的国际安全观)” 보고서 중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한 인상이 어떤지에 대한 응답 ……	31
〈그림II-2〉 2023년 칭화대 여론조사 “중국인의 국제안보관(中国人的国际安全观)” 보고서 중 중국이 직면한 아래의 국제안보 위협의 정도에 대한 응답 ……	44
〈그림IV-1〉 2014~2020년 북핵 문제 접근의 구도 ……	86
〈그림IV-2〉 중러 군사훈련 현황 ……	97
〈그림V-1〉 2023년 칭화대 여론조사 “중국인의 국제안보관(中国人的国际安全观)” 보고서 중 아래의 문제 중 중국이 우선 처리해야 할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응답 ……	128

중러북의 연대 방식은 한미일의 연대와 다르다. 특히 한미일의 군사 협력은 명시적이고 직접적이지만, 중러북의 군사 협력은 연쇄적이고 간접적이다. 중러북은 중러 군사훈련과 북한의 도발을 연쇄적으로 진행하고, 중러와 북한이 암묵적·간접적으로 연대한다. 중러북 3자 군사훈련이 실체가 없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삼국이 치밀한 사전 조율 없이도, 동시적 혹은 연속적으로 중러의 연합 군사훈련을 틈타 북한이 도발하든지, 북한의 도발을 틈타 중러가 군사 훈련을 진행하든지 이는 모두 한미일을 압박하고 한반도의 정세 불안과 긴장을 유발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도발이 한미일의 군사 대응을 초래하여 중국이 심각한 부담감을 느낀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함께 계속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적극적으로 두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중국도 한미일을 압박하는 북한의 도발을 놓고 북한을 더 이상 전략적 부채가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냉전과 진영화를 보는 중러북의 공식적인 시각은 차이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신냉전과 진영화에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만, 북한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 중러북의 신냉전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은 중러북의 신냉전에 대한 비공식적인 입장 때문이다. 즉 중국의 경우 한미일의 대중 압박과 핵심이익(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 수위가 지나칠 경우 중러북 연대에 대한 태도가 변할 수 있지만, 당분간 신냉전을 피하기 위해 중러의 대국 외교 중심과 중북의 한반도 주변국 외교 보완의 이원화 전략을 추진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러북 밀착을 중심으로 중국을 반미 연대로 전인하기를 원하면서 중국과는 다극화와 다자주의를 추동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신냉전과 동북아 군비경쟁 구도가 제공하는 전략적 기회 공간을 활용하여 체제 안전 보장 확보를 추구한다.

요 약

따라서 중러북 연대는 중국의 외교 전략과 중러관계 요인, 북한 도발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선 당분간 중러북 연대의 형태는 중국이 러시아와의 대국 외교 중심으로 외교 군사 관계를 주도하고, 한반도 주변국 외교를 통해 대국 외교를 보완하는 이원화 전략에 따라 형성된다. 이러한 중러북 연대는 한미일의 압박과 대만 문제와 같은 핵심이익 개입의 정도에 따라 이원화 전략에서 두 외교를 더 긴밀하게 연계시킬지 아니면 분리시킬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러북은 한미일과 다르게 경제적 상호의존도에서 시혜적 관계를 중심으로 중러가 북한 체제 지원을 추진하고, 역사 전쟁을 통해 반미 연대의 정체성을 공고화한다. 한미일의 탈중국과 디리스킹 공급망 재편 전략의 강화 정도와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중국의 러북과의 연대 동기도 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다양한 도발이 중러에 전략적 부담을 가중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중러의 북한 도발에 대한 두둔 공조 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중국 전략, 대러시아 전략, 대북한 전략에서 핵심은 한미일 연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포용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인 예로 경제안보 협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대북 제재 무력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일중 협의체 속에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협력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중러북 연대에 대한 중국의 적극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보편가치와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응하되 민간과 1.5 트랙 차원 소통과 교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중러북 삼각관계, 한미일 삼각관계, 신냉전, 중러관계, 중북관계, 러북관계, 한중관계, 한러관계, 남북관계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t features a series of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Two large, dark gray circles are positioned on the left, one near the top and one near the bottom. The right side of each circle is filled with a fine grid of small squares, creating a textured effect. The overall design is minimalist and modern.

I. 서론

이재영 (통일연구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11월 21일)과 고체연료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발사(12월 18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은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미일은 이번 북한 도발을 계기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미사일 발사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관련 정보)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고, 한미일 3자 훈련도 2024년 1월부터 정례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은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미사일 경보훈련, 해양 차단 훈련, 대잠전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12월 14일 중리는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 특히 동해 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이하 'KADIZ') 진입을 포함하는 제7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시행했고, 이는 올해 두 번째 중리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이었다. 한미일의 3자 군사훈련에 대응해 중리북이 3자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과 중리 군사훈련이 연속으로 시행되면서 미국과 한미일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다.

즉 한미일의 군사협력은 명시적이고 직접적이지만, 중리북의 군사협력은 연쇄적이고 간접적이다. 중리북은 중리 군사훈련과 북한의 도발을 연쇄적으로 진행하고, 중리와 북한이 암묵적·간접적으로 연대한다. 중리북 3자 군사훈련이 실체가 없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삼국이 치밀한 사전 조율 없이도, 동시적 혹은 연속적으로 중리의 연합 군사훈련을 틈타 북한이 도발하든지, 북한의 도발을 틈타 중리가 군사훈련을 진행하든지 이는 모두 한미일을 압박하고 한반도의 정세 불안과 긴장을 유발한다는 사실이다.¹⁾ 북한의 도발이 한

1)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이 진행되었고, 그 기간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어 중리는 블라디보스토크 연합훈련도 연쇄적으로 진행했다. 즉 중리북의 연합 군사훈련은 없었지만 중리북은 중리 연합훈련과 북한 도발의 연쇄 시행을 통한 연대로 한미일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다.

미일의 군사 대응을 초래하여 중국이 심각한 부담감을 느낀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함께 계속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적극적으로 두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중국도 한미일을 압박하는 북한의 도발을 놓고 북한을 더 이상 전략적 부채가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특히 한미일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포괄적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자 중러북 역시 3자 간 협력으로 발전하는 추세 속에서 북한은 가장 적극적으로 신냉전으로 규정된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중러북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러북 3자 관계를 동맹, 진영 등으로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연대 개념의 조작 정의를 통해 연대의 구성요소와 지표로 중러북 연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중러북과 한미일 연대 수준은 구심력, 정체성, 경제적 상호의존, 상대 진영과의 관계로 설명된다.²⁾

구체적으로 구심력, 경제적 상호의존도, 상대 진영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한미일이 중러북보다 연대 수준이 우세하고 특히 '구심력, 지속성, 회복탄력성' 요소로 보면 한미일 연대가 더 공고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체성 측면에서 반미주의의 경우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고 중러북에서 러북에 비해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러북 연대의 구조적 정착 여부는 불투명하다.³⁾

하지만 연대의 이러한 지표 중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우선 구심력에 있어 미국 동맹 중심 한미일의 강한 구심력, 그리고 외교 안보 자율성과 진영 내 연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지닌 중러북의 약한 구심력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2) 이기동·최용환, “한미일 대 중러북의 연대 수준 비교 및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no. 242, 2023.12.), pp. 1~2, <<https://www.inss.re.kr/common/viewer.do?atchFileId=F20231219100423618&fileSn=0>> (검색일: 2023.12.28.).

3) 이기동·최용환, “한미일 대 중러북의 연대 수준 비교 및 시사점,” p. 11.

설명했듯이 중러북의 연대는 암묵적이고 간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특징을 지닌 한미일의 연대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중러북의 구심력이 약하다고만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중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러시아가 점차 편입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도 다른 국가를 압도한다. 특히 중러북 모두 제재에 직면하여 이러한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삼국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정체성 측면에서 중러북의 반미주의 연대가 한미일보다 더 공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중국이 반미주의 연대에 러북보다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상호의존도 측면에서 한미일이 '호혜적 관계'라고 하더라도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경쟁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은 한국이나 일본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그리고 중러북이 경제 격차와 개방도의 큰 차이로 '시혜적 관계'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같은 무기를 공급하고, 중북 국경의 북한 지역에서 생산한 저렴한 전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중러북 사이 호혜성이 전혀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표 I-1> 중·러·북의 삼국 연대에 대한 인식과 전략 비교

		중국	러시아	북한
신냉전	공식 입장	신냉전과 진영화에	공식적으로 반대	신냉전 구도 적극적 지지
	비공식 입장	한미일의 대중 압박과 핵심 이익(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 수위 넘을 경우 연대에 대한 시각 변경 가능	러북 밀착을 중심으로 중국을 반미 연대로 견인 원함.	신냉전과 중러북 연대 현안 중 중국이 연루되지 않으려는 모습과 북한의 적극적 지지 사이 간극 존재

		중국	러시아	북한
	전략	신냉전을 피하기 위해 중리의 '대국 외교 중심'과 중북의 '한반도 주변국 외교 보완'의 '이원화 전략'	중국과는 다극화와 다자주의 추동하고 북한과는 반미 연대 추진	동북아 군비경쟁 및 신냉전 구도가 제공하는 전략적 기회 공간 활용 통해 '안전보장' 확보
	군사훈련	정례적 연합군사훈련 활성화를 통한 대미/한미일 압박 극대화		중리 연합군사훈련 시기 동시적 혹은 연속적 도발 감행
	북핵 문제	북한 도발에 대한 중리의 두둔 공조 체제 공고, 북한 7차 핵 실험에 관해서는 부담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승인 원함.
	장기적 이익	중러북 연대보다 EU와 미국 등 서방과의 경제협력에 상대적 이익이 크지만, 한미일의 대중 압박이 장기화할 경우 러북과의 연대 추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서방과의 경제협력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북한과의 군사협력으로 장기적 이익 확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 생존 지원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장기적 이익 확보
	한미일과의 군사 경제 관계	러시아와의 연합군사 훈련으로 한미일 압박,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대한 반제적 조치 중 핵심 광물 무기화 가능	중국과의 연합군사훈련과 북한과의 군사 교류로 한미일 압박, 제재 장기화 속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한미일의 압박에 대해 핵 고도화와 도발로 대응, 중리의 지원을 통해 대북제재 무력화 추진
	중러북 연대에 대한 구조적 제약 '약화 요인'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상순환으로 중국-한미일 간 긴밀한 경제 관계가 중러북 연대에 가하는 제약의 약화 가능성	북한과 연합군사훈련과 첨단무기 지원에 대한 제약(비용, 기술 이전 문제)은 반미 연대 강도에 따라 변화 가능. 중국과 지정학적 경쟁보다 협력을 통한 반미 연대와 다자주의 추진이 더 큰 전략적 이익 제공	북한은 7차 핵 실험을 하지 않고, 다양한 도발을 통해 중리에 전략적 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으면서도 한미일과 미국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는 전략 추진

출처: 저자 직접 작성.

특히 중러북 연대에 구조적인 제약이 되는 부분은 중국이 한미일과 모두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의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이 중러의 전략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미일이 미국 주도로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탈중국 혹은 디리스크링(de-risking)을 추진하는 중이고, 중국 역시 쌍순환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한미일의 긴밀한 경제 관계가 중러북 연대에 가하는 구조적 압박은 점차 약화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핵미사일 도발과 정찰위성 발사 등에 대해 중러가 여전히 두둔하는 공조 체제가 느슨해지지 않는 이상 북한의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이 중러의 전략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과 관련된 구조적 제약도 크게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중러북 연대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주로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중러북 연대 가능성의 한계에 관한 주요 요인은 중국과 러북과의 입장 차이이다. 즉 러시아와 북한은 신냉전 진영화의 수혜국이지만, 중국은 이로 인해 러시아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개입 확대, 러북 군사협력 확대에 의한 북한의 과도한 군사적 모험주의 야기와 이로 인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대중 압박 강화 초래를 가장 우려하기 때문이다.⁴⁾ 특히 중러와 러북 간 군사 안보협력에 비해 중북 안보협력은 한계가 있어 중러북 안보협력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⁵⁾

그리고 중국은 러북 간 군사적 연대 강화가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4) 이상숙, “북한과 중국이 바라보는 중러북 연대 가능성,” (통일연구원 서면 자문의견서, 2023.12.13.).

5) 이상숙, “최근 북한의 대러 및 대중관계와 북중러 경제·안보협력 전망,”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23-23, 2023.8.9.), p. 14,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228&menuCl=&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검색일: 2023.12.26.).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⁶⁾ 하지만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일부 원자재에 대한 세계의 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중국이 이러한 원자재를 본격적으로 무기화한다면 이는 중러북의 군사적 연대 강화로 인한 서방의 반발과 제재 효과를 상쇄 혹은 저지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이 중러북 연대를 망설이는 이유는 중국을 겨냥하는 한미일 협력 강화의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대 속에서 러북의 대중국 의존도가 확대되면 중국은 연루로 인한 전략적 부담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추가 핵 실험에 대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부담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러북 협력과 북한이 활용하기를 원하는 신냉전 체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중러북 3자가 아닌 양자 차원에서 러북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⁷⁾

마지막으로 북한 핵 도발로 인한 진영 논리가 중국의 패권국 도약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중러북 연대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중국이 중러북 연대 속에서 북한 핵 도발을 방치하면 중국의 대외 이미지 악화, 미국의 대중 압박 가중, 유사시 북한 전술핵무기의 중국 겨냥 가능성, 중국의 미래와 후손들의 안전 우려, 아시아에 핵 도미노 야기, 3대 세습의 핵 운영 안정성 담보 불가, 중북 국경 지역 핵실험장 방사능 유출과 오염 위험, 한미일의 대중국 포위 압박으로 인한 중국 경제 타격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⁸⁾

6) 이수석, “러북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입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이슈브리프 489호, 2023.11.23.), p. 4, <<https://www.inss.re.kr/common/download.do?atchFileId=F20231123161217023&fileSn=0>> (검색일: 2023.12.26.).

7) 김한권, “2023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및 전망: 북·중·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 (외교안보연구소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3-29, 2023.10.13.), pp. 15~19,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 (검색일: 2023.12.26.).

하지만 중국은 대체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않으면서 북핵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⁸⁾ 특히 북한 핵무기가 중국을 겨냥할 것이라는 사실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중북 국경 지역에서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우려는 있겠으나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대외 이미지, 미국과 한미일의 대중국 포위 압박이지만 중국은 북한 핵 도발의 미국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세습 체제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지 않고, 조선노동당과의 당 대 당 관계를 중시하며, 북한 체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 핵 도미노를 야기하는 것은 북한의 핵 도발이 아니라 미국과 한미일의 대북 압박과 제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중국이 중러북 연대에 소극적인 요인들은 실제 중국의 인식 및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중러북의 연대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 입장에서 삼국 연대가 러시아의 대외 전략과 상치되고, 한미일 간 캠프 데이비드 선언과 같은 중러북 사이 공식 문서나 선언이 없기 때문이다. 삼국 간 연합 군사훈련 역시 북한 측 비용 문제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 다만 러시아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협력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국이 삼국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조건으로 우선 미국 인태 전략의 영향력 강화 추세 속에서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여 삼국 연대에 적극 가담할

8) 변상정, “북핵 고도화와 중국의 안보 위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이슈브리프 483호, 2023.11.14.), pp. 1~6,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37005&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 (검색일: 2023.12.26.).

9) 2023년 11월 25일 우르창(吳日強) 중국 칭화대 교수의 북핵 문제 관련 토론회 발언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을 빈발뿐인 위협으로 과소평가하면서 한국의 과잉 대응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의 대북 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단독]中 전문가 “北 빈발 위협… 韓 과잉대응 말길,” 『동아일보』, 2023.11.2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1127/122359302/1>> (검색일: 2024.1.19.).

수 있고, 러북 밀착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에 도전이라는 신호 발설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기 때문에 중러북 연대를 중국이 완전히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¹⁰⁾

따라서 II장에서 IV장까지는 중러북 연대에 대해 중국을 포함해 각국은 실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각국 관방(官方) 언론 자료, 외교부 등 정부 부처의 입장과 정책, 최고 지도자의 발언과 인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과연 중러북 연대에 대해 중국은 실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지, 혹은 러시아와 북한이 실제 중러북 연대에 대해 어떤 전략적 계산과 의도가 있는지를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V장에서는 중러북 연대 가능성에 있어 앞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동하는 요인도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 가능성 있는 중러북 연대를 저지하기 위한 대중국/대러시아/대북한 전략을 도출할 것이다.

10) 엄구호, “러시아가 바라보는 북중러 연대 가능성,” (통일연구원 서면 자문의견서, 2023.12.13.).

Ⅱ. 중·러·북 연대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¹¹⁾

이재영 (통일연구원)

-
- 11) 중국의 인식과 대응 관련 내용 중 별다른 각주가 없으면 통일연구원과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의 비공개회의(2023.9.12.~14., 주제: 새로운 한반도 정세와 한중협력),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의 전략대화(2023.12.7., 주제: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화와 한중협력) 결과와 기타 자료에서 중국 측 입장과 주장에 기초해 작성함.

중국은 러북 밀착에 일단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¹²⁾ 한미일의 군사 안보협력을 통한 대중 압박과 견제, 중국 핵심 이익(대만 문제) 개입이 가속화된다고 판단할 때 중·북/중·러 양자 관계 강화를 통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 방식으로 중러관계의 ‘대국 외교’와 중북 관계를 포함하는 ‘한반도 주변국 외교’의 ‘이원화 전략’을 통해 중국이 대외적으로 반대하는 신냉전의 진영화 논리를 우회하면서도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1. 중·러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 대국 외교

가. 중·러의 대국 외교를 통한 대미 메시지 관리: 다극화와 다자주의 중시

중국의 대국 외교는 주로 정상외교를 통해 드러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23년 총 4차례 외국(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베트남)을 방문했고, 제3회 일대일로 국제 고위급 포럼의 외교행사도 개최했으며,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및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다자 무대에서 중국 외교를 펼쳤다. 그 가운데 미국, 러시아,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와의 정상회의가 이목을 끌었는데, 특히 러시아는 시 주석의 올해 첫 방문국이었고,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12월 초 EU와 중국

12) 1980년대 초에도 대미 관계 중시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우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협력에 대해 중국은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해 중국은 북한과 안보협력 대신 북한의 청진항 활용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였다. 이 시기 중러관계는 중소 분쟁 이후 중소 관계 회복 이전으로 소련의 동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에 위협을 느끼고 이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상숙, “북한과 중국이 바라보는 중러북 연대 가능성.” 하지만 지금의 중러관계는 상호 위협이나 견제보다 반미 연대 형성이라는 공동의 이익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사이 정상회의로 관계 개선 조짐을 전 세계에 전달하기도 했다.¹³⁾

중국은 러시아와의 대국 외교 속에서 미국의 패권주의 반대, 다자주의와 다극화, 글로벌 정치경제 체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 국제사안 관련 신흥시장과 개도국 대표성 발언권 확대 등 주로 대미 메시지를 발설하고 있다. 특히 10월 18일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중러 정상회담, 10월 19일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 북한 최설희 외무상과 회담 등 중·러·북 사이 일련의 연쇄 회담을 통해 중·러·북 상호 전략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와 냉전 시기 양극체제를 부정하면서, 세계가 다극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다극화 구조와 맞지 않는 서방 국가 중심의 글로벌거버넌스 체계를 개혁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 새로운 세력도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⁴⁾ 지역 내 국가들이 역내 위협에 직면할 때 공동으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주도의 단극 질서 속 한 국가의 힘만으로 현재 직면한 복잡한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3) “北京聞風：元首出訪收官2023中國外交復蘇強,” 『明報新闻网』, 2023.12.16., <<https://news.mingpao.com/pns/%E4%B8%AD%E5%9C%8B/article/20231216/s00013/1702665874390/%E5%8C%97%E4%BA%AC%E8%81%9E%E9%A2%A8-%E5%85%83%E9%A6%96%E5%87%BA%E8%A8%AA%E6%94%B6%E5%AE%98-2023%E4%B8%AD%E5%9C%8B%E5%A4%96%E4%BA%A4%E5%BE%A9%E8%98%87%E5%BC%B7-%E6%96%87-%E9%8D%BE%E9%B3%B4%E4%B9%9D>> (검색일: 2022.12.19.).

14) 글로벌거버넌스 체계 개혁은 곧 중국과 러시아가 수정주의 세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의지와 기회가 있고 미국주도의 국제질서가 양국의 필요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수정주의의 길을 간다는 주장은 다음 연구를 참고하라. Gerlinde Groitl, *Russia, China and the revisionist assault on the western liberal international order* (Cham: Palgrave Macmillan, 2023), pp. 431~434. 그리고 탈냉전 시기 서방 세력의 자유주의적인 보편주의 규범의 틀이 구조적이고 문화적 차원에서 한계에 도달했고, 세계질서는 비서구, 비자유주의 세력의 부상으로 정치적인 다원주의가 출현한다. Suzanne Loftus, *Russia, China and the West in the Post-Cold War Era: The Limits of Liberal Universalism* (Cham: Palgrave Macmillan, 2023), p. 178.

나. 중·러 연합 군사훈련 정례화·활성화를 통한 한·미·일에 대한 압박 극대화

그리고 중러의 연합군사훈련이 점차 정례화·활성화되고 있다. 2023년 12월 14일 중러의 연간 협력 계획에 따라 동해 및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7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발표했다. 이는 올해 두 번째 중러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이다. 한국 언론에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를 인용하여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하여 17분간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 군용기가 국제 해역에서 진행한 정상적인 비행활동이자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가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동 순찰의 정례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의미가 있고, 동해 중심 순찰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순찰에 정찰 및 표적 지정 임무를 수행하는 Y-8이 추가 투입된 것에 주목하며, Y-8 전투기를 통해 주변 정세에 대한 경계 강화와 중러 전략 폭격기의 원거리 공격 조력과 같은 강한 억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언했다.¹⁵⁾

중러의 이러한 연합 공중훈련은 한미일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지난 2023년 10월 22일 한미일이 한반도 인근 공역에서 사상 첫 연합 공중훈련을 하면서 한미일 전투기가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를 호위하며 편대비행하는 방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훈련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공중역량을 통합하여 동북아 내 병력 배치의 일부분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미국이 북핵 문제를 빌미로 지역 긴장 조성과 아태 동맹국들에 대한 통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중국은 비판했다. 한미일 3국의 결탁은 동북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가 북한과의

15) “中俄今年第二次联合空中巡航，韩国炒“中俄军机进入韩防空识别区”，『环球时报』，2023.12.15.，〈<https://mil.huanqiu.com/article/4FIQZQKu7E4>〉(검색일: 2023.12.19.).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 두 개의 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

중국은 중러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정상적인 군사 교류로 주장하면서 이것이 러시아의 전략적 행동,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을 중국이 완전히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과 교류와 협력은 강화하지만, 이것이 북한의 핵 보유를 중국이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훈련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리해서 접근할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지원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분리해서 접근함으로써 미국과 서방의 대중 압박을 회피하면서도 중러 군사훈련을 통해 한미일의 압박을 상쇄시키기를 원한다.

다. 중·러의 경제 관계와 다자외교: 사상 최대 무역 달성과 다극화 국제질서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10월 중러 교역액은 총 1,964.81달러로, 작년 한 해 교역액(1902.71억 달러)을 이미 초과하여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교역액 증가율도 27.7%로, 여타 주요 교역 대상 간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2018년 중러 교역은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중러 간 자원협력이 확대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기업 철수 공백을 중국 기업이 메꾸고 있다. 중러는 정치적 신뢰 심화로 교역 편의 확대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¹⁷⁾

16) “韩美日首次在朝鲜半岛举行联合空中演习 滕建群：此举给东北亚地区带来极其负面的影响,” 『央广军事』, 2023.10.23., <https://military.cnr.cn/zt/wfgjgq/jsrp/20231023/t20231023_526460943.shtml> (검색일: 2023.12.19.).

17) EMERiCs 신홍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이슈트렌드] 구소련권 국가들, 중국과 외교 및 경제교류 확대,” 2023.12.1.,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57294&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

특히 중리는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무역과 경제 관계 속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블화 결제 등 확대를 추동하고, 중국 주도의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을 통해 개도국 인프라 지원과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3월 중리 모스크바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서 2030년까지 새로운 차원의 전방위적 전략 경제-안보협력, 다극화 국제질서, 유라시아 지역 정치경제 공동체 구축 추진에 합의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체와의 협력 확대를 중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리 간 에너지 협력도 2023년 러시아산 가스의 대중 공급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여 시베리아의 힘을 통해 3백억m³ 이상 대중 수출이 진행되었다. 2023년 10월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중리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금융, IT 등 분야 중장기 협력을 논의했다.¹⁸⁾ 중리 간 이러한 협력 강화는 첨단기술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에 절실한 협력은 아니지만 향후 양국의 협력 심화에 따라 특히 첨단 군사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

라. 중·러의 고위급 정례 회담: 협력 분야 확대와 반서방 담론 전파

2023년 12월 15일 덩쉐샹(丁薛祥)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베이징에서 알렉산드로 노바크(Alexander Novak) 러시아 부총리를 만나 제 20차 중리 에너지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덩 부총리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전략적 견인하에 양국의 에너지

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 2024.1.26.).

18) 정재홍·이동민, “새로운 국제 질서 출현 시기의 중·러간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본격화 및 한계,” (세종연구소 세종정책브리프 no. 2023-17, 2023.12.11.), pp. 6~7, pp. 16~18, <<https://www.sejong.org/web/board/1/egoread.php?bd=3&seq=7478>> (검색일: 2023.12.19.).

지 협력이 평등·호혜·실질 협력의 본보기로 자리잡았다”며, “러시아 측과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높은 수준의 에너지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산업망과 공급망의 회복력 확대를 원한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덩 부총리는 가스와 원자력 무역 및 협력 공고화, 재생에너지 및 수소 에너지 등 새로운 협력 분야의 적극 개척,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진정한 다자주의 실천을 제안했다.¹⁹⁾

그리고 중러 간 총리급 정례 회담은 1996년 이래 매년 개최되어 양국 최고지도자의 합의, 종합 조정과 각 영역의 실무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밝혔다. 올해 양국 총리는 28차 정기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2024년 중러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러 문화의 해를 가동하고 인문과 지방 교류 증진으로 중러의 신시대 전면전략협력동반자 관계의 진일보 심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²⁰⁾

결국 고위급 정례 회담의 활성화를 통해 전략 소통을 강화하려는 주요 원인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다. 중러는 선전 선동을 통해 반서방 담론을 전 세계에 전파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제3국 정보 조작 및 개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²¹⁾

마. 중·러의 전략적 이익 충돌로 인한 전략적 불신 가능성

하지만 중러 간 여전히 불신이 팽배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러시아가 중국과의 시베리아2 에너지 협력 사업을 원하고 있지만, 중

19) “丁薛祥与俄罗斯副总理诺瓦克共同主持中俄能源合作委员会第二十次会议,”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网站, 2023.12.15., <https://www.gov.cn/yawen/liebiao/202312/content_6920578.htm> (검색일: 2023.12.19.).

20) “2023年12月18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网站, 2023.12.18., <https://www.mfa.gov.cn/fyrbt_673021/202312/t20231218_11206304.shtml> (검색일: 2023.12.19.).

21) 정재홍·이동민, “새로운 국제 질서 출현 시기의 중-러간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본격화 및 한계,” p. 5.

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고, 만약 중국이 대러 안보 지원을 강화할 경우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오는 압박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도 중요하나 중러 간 과도한 군사 안보협력이 미국뿐 아니라 EU 국가들의 대중 압박 강화를 초래하기에 중국은 이에 신중하다는 것이다.²²⁾

구체적으로 중국은 시베리아2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투자를 거부했고, 러시아는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철수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중국을 통해 벌충하기 원했지만, 현재 시베리아1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에 판매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유럽과 튀르키예에 판매했던 가격의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러시아의 대중 가스 수출은 추출·운송의 운영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사실 중국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중앙아시아와 그 이상 범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결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러관계는 중국이 러시아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이다.²³⁾

종합하면 중러 간 전략적 불신을 야기하는 전략적 이익의 충돌 혹은 상충의 여지가 있는 이슈는 대미, 대유럽 경제 관계 관련 중러의 이해 상충, 중러 간 무역 수지 불균형, 극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권 확장으로 인한 러시아와의 이해 충돌,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상이한 입장(중국은 유지, 러시아는 변경) 등이다.²⁴⁾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연대의 진정한 한계는 우선 미국이 소수 서방

22) 이상숙, “북한과 중국이 바라보는 중러북 연대 가능성.”

23) Ksenia Kirillova, “China Exploits Russia’s Vulnerabilities,” EURASIA DA ILY MONITOR, 2023.12.5., <<https://jamestown.org/program/china-exploits-russias-vulnerabilities/>> (검색일: 2023.12.20.).

24) Yun Sun, “China’s Strategic Assessment of Russia: More Complicated than You Think,” War on the Rocks, 2022.3.4., 재인용: 이기동·최용환, “한미일 대 중러북의 연대 수준 비교 및 시사점,” p. 12.

국가만을 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구축 목표가 아니라 전 세계를 포괄하는 새로운 질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중러 전략적 불신의 근원은 역내 안보 질서에 대한 양국의 이해 상충이다. 즉 러시아의 전략적 야심이 미국 주도 안보 질서에 도전하는 것인 반면, 중국은 국내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유리한 안정적인 지역 안보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주도 안보 질서에 도전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로 미중 관계가 회복되면 중러 연대는 약화할 수 있다.²⁵⁾

바. 중·러의 연대 추동 요인: 다극화, 반미 연대, 대체 불가능한 협력 분야, 중국인의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 상승

이러한 중러 연대의 제약 요인과 함께 추동 요인도 무시하기 어렵다. 즉 중러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포괄하는 다극화 질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주도 안보 질서에 중국이 도전하지는 않겠지만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외부 세력이 대만독립에 개입한다면 중국은 미국주도 안보 질서에 도전할 것이 분명하며, 미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해빙기에 들어가고 미중 협력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대체할 수 없는 중러 연대 요인인 에너지 협력, 군사 합동 훈련과 군사 기술 교류,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 두둔 공조 등 협력 유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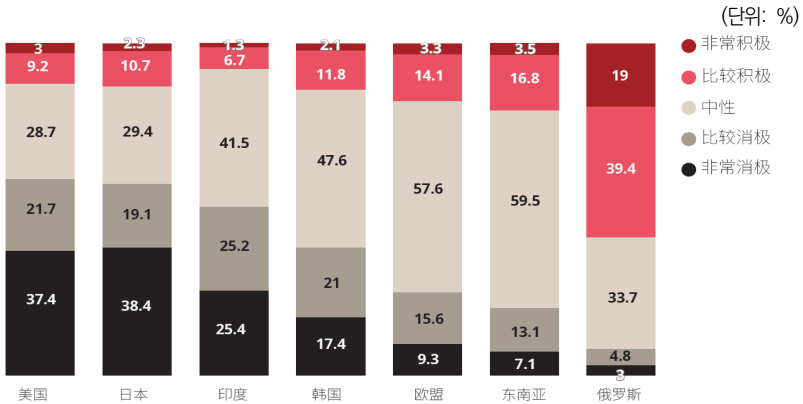
2023년 12월 20일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러시아의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을 만나 중러관계 발전은 상호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선택은 양국 국민들의 근본적인 이익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경제, 무역, 에너지 등 영역에서 더 심화된 협력을 통해 중러가 함께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자

25) 정재홍·이동민, “새로운 국제 질서 출현 시기의 중-러간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본격화 및 한계,” pp. 19~25.

고 역설했다. 중리는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양국 무역을 2천억 달러로 증가시키는 데 합의했고, 2023년 1월~11월 2천억 달러를 돌파하여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²⁶⁾

마지막으로 중국인의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 상승과 같은 국민 정서적인 요인도 무시하기 어렵다. 지난 5월에 칭화대학교(清華大學)에서 발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은 긍정적인 경우가 약 60%(매우 긍정적 19%, 비교적 긍정적 39%)로 조사 대상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반면에 한미일 중미국과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각각 60%, 57%로 가장 부정적이었고, 한국은 중립이 47%, 부정이 38%였다.

<그림 II-1> 2023년 칭화대 여론조사 『중국인의 국제안보관(中国人的国际安全观)』 보고서 중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한 인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응답



출처: 清华大学战略与安全研究中心, “中国人的国际安全观”民意调查报告, 2023.5.24., <<http://ciss.tsinghua.edu.cn/info/qb/6140>> (검색일: 2023.12.19.).

26) “Deeper China-Russia relations a ‘strategic choice’ by both sides, Xi Jinping tells Russian Prime Minister Mishustin,” *South China Morning Post*, 2023.12.20.,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245774/deeper-china-russia-relations-strategic-choice-both-sides-xi-jinping-tells-russian-prime-minister>> (검색일: 2023.12.20.).

이러한 여론조사가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에 대한 중국인의 호감이 장기화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 향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인의 호감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도 증가한다면 이는 중러관계가 단순히 한미일의 대중 압박 대응 차원이 아닌 자체적 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중·북 관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한반도 주변국 외교

가. 한반도 주변국 외교를 통한 한반도 영향력 확대

중국은 주변국 외교를 중시한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정상 외교의 첫 손님으로 주변국 외교 대상인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Ferdinand Marcos)를 맞이하였고, 올해 마지막 정상외교 역시 동남아의 베트남을 시 주석이 방문해 2023년 처음과 끝을 주변국 가운데 동남아 국가로 장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국에게 주변국 외교는 새로운 안보 국면 구축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국면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에 유리한 외부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²⁷⁾

중국 외교부 부부장 쑤웨이둥(孫衛東)은 지난 10월 24일 친성혜용(친밀, 성실, 호혜, 포용) 주변 외교 이념 제시 10주년을 기념하여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세미나 폐막식에서 「신시대 중국의 주변 외교정책 전망(이하 ‘전망’)」 발간을 선언했다. 이는 중국의 주변국 외교정책을 전문적으로 서술한 첫 정식 문건이었다. 중국은 주변 28개국(북한, 러시아, 한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과 동반자 관계, 협력 관계, 전략 호혜 관계 수립으로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대했고, 주변 18개국(북한, 러시아, 한국, 일본, 몽골, 파키스탄 등)의 최대교역국으로 2022

27) “北京聞風：元首出訪收官2023中國外交復蘇強,” 『明報新闻网』.

년 주변국 간 교역액이 2012년 대비 78% 증가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장기적 안정을 위해 혁신적인 ‘쌍중단(雙暫停, 중국 용어의 직역은 쌍잠정이나 한국에서는 쌍중단(雙中斷)으로 번역하여 사용, 이하 ‘쌍중단’)과 ‘쌍궤병행(雙軌並行)’을 제안하고, 정치적 해결의 방향을 견지하며 대화와 평화를 촉진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주변국 외교 이념인 친선혜용을 실천하기 위해 주변국과 평등하고 개방적이며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종합적으로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의 안보관을 견지하고, 지역 국가와 함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은 강조했다.²⁸⁾

한편 2023년 7월 27일 북한 전승절 70주년에 리홍중(李鴻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군사대표단이 아닌 당정대표단, 러시아는 군사대표단, 1993년 후진타오(胡錦濤) 정치국 상무위원, 2013년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에는 류귀중(劉國中) 부총리를 단장(2018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을 파견하여, 일각에서는 과거에 비해 대표단장의 격이 낮아진 것에 대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홀대나 북한의 중국에 대해 서운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확실하지 않다. 중북 사이에는 이미 2018년 이후 다섯 차례 정상회담과 코로나19로 중단된 각 분야(교육, 문화, 체육, 청년, 지방, 민생경제) 교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APEC회의 미중 정상회담(11월 15일)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과 9월 13일 유엔(United Nations: UN, 국제연합)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에 중국이 보낸 탈북민 강제 복송에 대한 입장에서 북한에서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²⁹⁾을 볼 때 중국은

28) “新时代中国的周边外交政策展望(全文),” 『新华网』, 2023.10.24., <http://www.news.cn/world/2023-10/24/c_1129935778.htm> (검색일: 2023.12.19.).

29) 탈북민 강제 복송에 대한 중국 측 입장(유엔 서한)은 북한에서 대규모 인권침해(고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중국의 유엔고문방지협약 국제법 위반 주장을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를 증시한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11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북 경제 문화 협력 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고, 테닝(鐵凝) 전국인대 부위원장과 리용남 주중 북한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이 행사는 중국 상무부와 문화여유부가 공동 주최했고, 중련부, 외교부, 상무부, 문화여유부, 주중 북한대사관 등 양측 유관 부처와 기간 대표도 참석했다.³⁰⁾

2024년은 중북 수교 75주년으로 고위급 상호 방문, 그리고 관광, 국경 개방, 북한 고려항공의 중국 베이징과 선양 등 지역 운항 재개, 북한 노동자 파견 등 중북 협력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냉전과 중러북 연대 현안에서 중국이 연루되지 않으려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중북 간 이러한 입장 차이가 지금까지 상호 고위급 대표단 파견에 어느 정도 투영됐던 것도 사실이다.³¹⁾ 따라서 2024년 중북 수교 75주년의 정주년을 맞아 파견하는 대표단의 격과 특징을 파악하여 중러북 연대에 대한 중북 간 전략적 이해의 간극이 좁혀질 가능성을 추론해볼 필요도 있다.

나. 북한 도발에 대한 중국의 두둔과 미국 책임론 강조

2023년 11월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중국 측은 각 측의 냉정과 자제 유지,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 유지, 쌍궤병진 사고와 단계적·동시적 행동 원칙의 대화 전개의 원론적 입장을 펼쳤다.³²⁾ 이전에

반박했다. 그리고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수백 명이 10월 강제 복송된 사실과 탈북민 2천 명이 구금돼 있다는 유엔 지적에 대해 중국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여전히 증시된다는 근거를 보여준다. 「[단독]中的 적반하장…강제복송 전 유엔에 “北 고문 증거 있다”, 『중앙일보』, 2023.11.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8524#home>> (검색일: 2024.1.19.).

30) “铁凝出席《中朝经济及文化合作协定》签署70周年纪念活动,” 『新华网』, 2023.11.28., <http://www.news.cn/2023-11/28/c_1129998116.htm> (검색일: 2023.12.19.).

31) 김한권, “통일연구원 2023년도 수시 과제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전략 최종보고회 토론문,” 2023.12.26.

한국 측에서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두둔을 비판하자 중국은 이번에는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³⁾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북한 도발 두둔은 중국이 여전히 북핵 문제 해결보다 북한 정권 생존을 더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3년 12월 15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베이징에서 북한의 박명호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진행했다. 이 회담에서 중북은 2024년 중북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측 간 우호 협력 관계 심화와 전략적 소통 및 조율 강화에 동의했다. 중북 관계에서 정치 사안 관련 협상은 지난 2019년 8월 중공 중앙 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과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군사 회담 이후 처음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⁴⁾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12월 18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를 만났고,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중북 전통 우의는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도와 직접적인 관심하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시종 전략적 고도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북 관계를 대하고, 북한과 한 길을 가며,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여 각 영역 교류 협력 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명호 부상도 중국과 함께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하며, 지역 평화 안정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³⁵⁾

주목해야 할 사실은 중북 간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시기에 북한이

32) “중국, 北 정찰위성 발사에 “관련 당사국 냉정·자제 유지해야,” 『동아일보』, 2023.11.2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1122/122305543/1>> (검색일: 2024.1.19.).

33) “미 “동맹 방어 모든 조치” 중 “당사국 냉정 필요,” 『경향신문』, 2023.11.22.,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1122104005#c2b>> (검색일: 2023.12.19.).

34) “中朝举行外交磋商,”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网站, 2023.12.16., <https://www.mfa.gov.cn/wjbxw_new/202312/t20231216_11203741.shtml> (검색일: 2023.12.19.).

35) “王毅会见朝鲜外务省副相朴明浩,”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网站, 2023.12.18., <https://www.mfa.gov.cn/wjbzhd/202312/t20231218_11205966.shtml> (검색일: 2023.12.19.).

ICBM 발사 도발을 한 것이다. 12월 18일 오전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고, 이는 7월에 이어 5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6,0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³⁶⁾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王文斌)은 한반도 문제를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압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는 오히려 긴장을 조성하는 역효과를 내기에, 대화 협상의 정치적 해결 방법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발표했다.³⁷⁾ 중국 측에서 언급한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압박은 한미일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제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의 부산해군 기지 입항 등 한미일 군사협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³⁸⁾ 북한 도발의 책임을 한미일과 미국에 돌리면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7월 북한이 15,000km ICBM을 발사한 후 개최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장쥘(張軍) 주유엔 중국대사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해소를 촉구했다.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소를 요구하면서도, 결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으로 비판한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 패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은 협상 단계마다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북핵 문제 교착의 책임은 미국과 미북 관계이지 중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실제로 사용

36) “중국, 北 ICBM 발사에 “군사적 압박, 역효과에 긴장만 고조시켜”, 『연합뉴스』, 2023.12.18.,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8130000083>> (검색일: 2023.12.19.).

37) “2023年12月18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网站, 2023.12.18., <https://www.mfa.gov.cn/fyrbt_673021/202312/t20231218_11206304.shtml> (검색일: 2023.12.19.).

38) “중국, 北 ICBM 발사에 “군사적 압박, 역효과에 긴장만 고조시켜”, 『연합뉴스』.

의지는 없다고 인식하며 북핵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실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의 발언처럼 북한 체제의 존망에 근본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북한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선 비핵화한 이후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한반도 긴장과 대립 완화, 국가 간 안보 신뢰 강화, 인적, 경제, 무역 교류를 추진하면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2023년 8월 25일 유엔 안보리의 북핵 문제 관련 공개 회의에서 경쌍(耿爽) 주유엔 중국 부대표는 한반도 문제가 단순한 핵미사일 문제가 아니며 냉전이 남긴 정치와 안보 문제로, 그 핵심이 상호 신뢰 부족과 평화 메커니즘 결여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군사 훈련은 상호 신뢰 증진과 한반도 평화 메커니즘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긴장 고조와 충돌 위험 고조로 전쟁 초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경 부대표는 현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에 필요한 것은 분열과 대립 대신 일치된 단결로 실질적인 행동과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호응하여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³⁹⁾ 이처럼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는 이유는 북한을 전략적 부채가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면서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식 해법의 한계와 중국 외교의 우선순위

중국은 한미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비핵화 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닌

39) “中国代表：朝鲜半岛问题核心在于互信缺失、和平机制缺失,” 『中国新闻网』, 2023.8.26., <<https://www.chinanews.com.cn/gj/2023/08-26/10067479.shtml>> (검색일: 2023.12.19.).

북한 정권 교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은 대북 제재 수단을 포기하지 않지만, 한미일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⁴⁰⁾ 중국은 현재 북한 비핵화보다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우선하고 있고, 합리적인 안보 우려는 북한이 처해 있는 위협에 대한 고려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장하는 북한 비핵화 해법인 ‘쌍중단과 쌍궤병행’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보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평화 체제 구축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합리화’함으로써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약화를 야기하고, 북한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적 의도이다.

중국은 쌍궤병행, 쌍중단을 대체할 수 있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북핵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외교 역량과 관심이 대부분 미국과의 관계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와 비핵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고, 미중 관계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변화를 유도할 방법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우선시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인데, 미국 외교에서 북한 비핵화 역시 우선순위가 낮다. 따라서 당분간 중국이 북한 비핵화 관련 새로운 해법을 내놓지는 않을 전망이고, 쌍궤병행과 쌍중단은 북한 비핵화 목표보다 자국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구실로써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신형 국제관계와 신형대국관계에서 외교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북한의 7차 핵 실험과 북핵 위기가 다시 찾아오지 않는 이상 기존 정책과 해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변화가 생기

40) 특히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고도화 정도를 볼 때 제재가 북한 핵실험을 막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재의 효과와 실효성에 지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를 통해 미국과 서방에서 중국에 적용하는 제재 역시 그 목표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제재 무용론을 주장한다.

더라도 미세한 조정만 있을 것이다. 미세한 조정이란 한미일, 한미동맹이 북핵 문제에서 중국 책임론을 거론할 때마다 미국 책임론으로 응수하고,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한미 연합훈련 중단)와 비핵화 사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미국의 핵 위협 해소도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이자 동북아에서 핵 비확산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지속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3. 중·러·북 연대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가. 중국의 공식 입장과 연대 선호 방식: 진영화 반대와 중·러의 역할 분담

중러북 연대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인식과 전략은 우선 러북 밀착이 미국의 압박과 상호 간 전략적 필요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진영화로 볼 수 없으며,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진영화를 최대한 막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직면한 안보적 압박이 증대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전망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중러북의 연대가 진행된다면 그 구체적인 방식은 국제사회와 미국을 의식해 중국이 대북 제재와 무관한 교류(관광, 농업, 보건의료 등)를 추진하고, 군사와 같은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교류는 러북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진행되면서 중러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북한 체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중러 간 면밀한 사전 조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중국과 러시아 각 측의 국익과 전략적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북핵 이슈에 있어 2023년 11월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관련 중러의 일치된 의견은 추가 제재 반대와 정치적 해결과 대화 중시이다. 북핵

위협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스냅백(snap back) 조항 등을 통한 선 제재(민생 관련) 완화와 한반도 정세 악화의 미국 책임론을 통해 한반도 정세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나. 중·러·북 연대 분야별 평가: 외교와 담론

외교 분야에서 중러북 3국 간 협력은 긴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방식으로써 중러의 '대국 외교 주도'와 중국이 주도하는 '주변국 외교(한반도 외교) 보완'의 이원화 전략을 통해 한반도 평화 안정과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 특히 내년은 중국과 북한·러시아 사이 수교 75주년 정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은 외교 분야에서 러북과의 연대를 통해 다극화와 진영화 반대 외교를 적극 추구할 전망이다. 즉 러시아는 북한과의 밀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위한 협조(탄약 지원)를 얻고, 북한 역시 한미일과 대립 속 중러의 체제 생존과 군사 기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러시아와 북한은 진영화의 최대 수혜국이지만 중국은 최대 피해국이라는 인식을 중국은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23년 9월 13일 러북 정상회담 이후 러북 밀착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것이다. 곧이어 왕이 외교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했고, 왕이와 푸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의 핵심은 미국의 패권주의 반대, 다자주의와 다극화 등 주로 대미 메시지였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개선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대북 영향력 행사에 있어 러시아와 경쟁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더라도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고 중국은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북·러북·중러 세 쌍의 양자 관계가 상호 간 아무런 연동이나 종속성이 없고, 제삼자에 대한 적대적 성격이나 침략적 성격이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중국에 불리한 진영화와 신냉전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⁴¹⁾ 특히

중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식적인 외교 전략에서 서방에서 제기한 중러북을 하나의 진영으로 묘사하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이 중러북 구도를 부각시켜 중국을 세계통합주의(globalism, 혹은 다자주의)의 반대편으로 몰아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 중국은 특정 진영에 편입되거나 집단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⁴²⁾

중국이 마치 중러북의 진영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일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 분석과 정치적 이익 관련 특정 집단의 영향 아래 이러한 실제와 괴리가 있는 정보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이 진영화를 추진하면서 국가 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중국이 진영화를 추진한다는 인식과 담론을 세계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중국이 진영화를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과 서방이 언론을 호도하여 만든 음모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명시적·직접적으로 중러북 연대를 추진하지는 않지만, 중러의 대국 외교와 중북의 주변국 외교의 연계와 중러 연합 군사훈련과 북한 도발의 연계로 중러북 연대를 간접적·암묵적으로 추동하고 있다.

다. 중·러·북 연대 분야별 평가: 군사와 경제

군사 분야 무기 거래를 포함한 러북 간 협력은 심화할 것이나 중북 군사협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전망이다.⁴³⁾ 중러북 연합훈련은 현실적

41) 특히 러북, 중러 양자 관계 범주의 일에 대해 외부에서 냉전 시대 동북아의 북방 삼각과 남방 삼각 간 대립 국면으로 비유하는데, 이는 한미일 군사 동맹 구축의 정당성을 확대하면서 주변국에 냉전의 기억을 환기시켜 불안감을 불러와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赵隆：炮制中俄朝“轴心”的动机太明显了,” 『环球时报』, 2023.9.21.,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Ecke4Jqxkh>> (검색일: 2023.12.19.).

42) “中俄举行第十八轮战略安全磋商，专家：中国希望与俄维持全球战略稳定,” 『环球时报』, 2023.9.20., <<https://m.huanqiu.com/article/4Ebs4y29Tv7>> (검색일: 2023.12.19.).

43) 러북 군사 협력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중 평화적 목적 포함 탄도기술 활용 미사일

으로 어렵고, 중러 간 연합훈련은 이미 정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북 군사협력 저조를 중북 관계의 악화로 볼 수 없고 앞에서 설명한 중러 간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러북 관계 격상에 대해 역사적 필연성과 현실적 필요에 따라 양국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서, 김정은의 방러와 군사, 경제, 에너지 측면 러북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중국은 러북이 핵무기 관련 협력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러북 모두 핵 기술협력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다고 보았다. 특히 러시아 역시 북한에 대한 핵확산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해군(잠수함)과 공군(전투기)의 군사력 발전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중러 간 협력이 가능할 수 있으나, 북한 포함 3국 간 경제협력 가능성은 작고, 주로 중(러)의 대북 지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중러, 중북 경제 협력은 주로 제재 회피와 제재 무력화 시도일 것이다.

종합하면 대북 제재 외 교류는 중북 밀착(교육, 문화, 체육, 청년, 지방, 민생경제), 군사와 같은 대북 제재 관련 교류는 러북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중러가 상호 역할 분담을 하고, 양국 모두 북한 체제 지원으로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북 관계에 대한 중러의 이러한 역할 분담은 중러의 대국 외교의 산물로도 볼 수 있으나, 사전에 양국이 치밀하게 조율하기보다 상황과 사안에 따라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발사 금지를 규정했지만, 러시아 발사체에 북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금지하지 않아 이를 러북 간 위성 기술 협력 기회를 열어주는 규칙의 구멍임을 러시아 측에서 밝혔다(아스몰로프). 그리고 2023년 7월 26일 쇼이구(Sergei Shoigu) 국방장관의 평양 방문 때 러북 군사 합동 훈련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엄구호, “러시아가 바라보는 북중러 연대 가능성.”

라. 중·러·북 연대 촉진 요인: 한·미·일 안보협력, 중국 핵심 이익 개입, 아태지역 나토화, 이념과 역사

한미일의 군사 안보협력을 통한 대중 압박과 견제가 강해질수록 중국은 이를 우회하고 상쇄하기 위한 중러북 삼각관계보다 중북/중러 양자 안보-경제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즉 중국은 진영화를 원하지 않지만, 미국과 그 동맹의 중러북에 대한 압력과 봉쇄가 증가할수록 중러북의 반미 연대를 협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과 동맹국의 중국 핵심 이익(대만 문제) 개입이나 아태지역 나토화 촉진 등 조건에 따라 러시아, 북한과 연대 가능성도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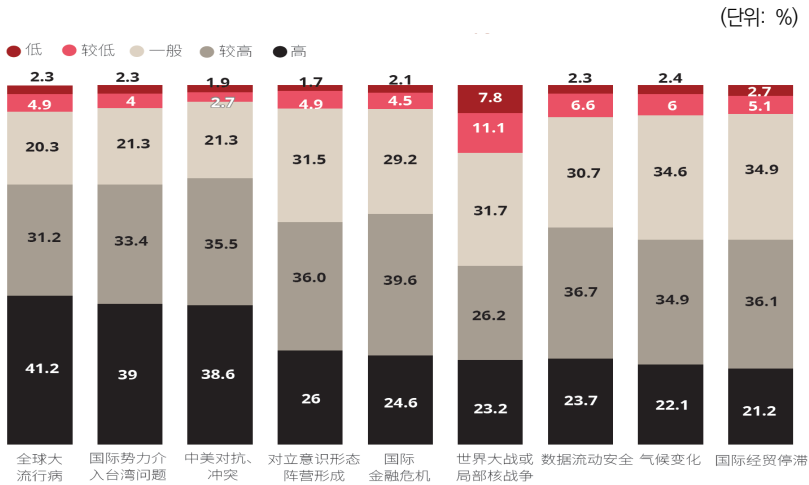
특히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와 한일관계의 진일보 개선 이후 한미일이 집단안보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는 냉전 이후 동북아에서 가장 큰 변화이자 아태지역의 나토화를 초래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안보 관계가 한반도 차원에서 북핵 억지를 위한 한미일 군사 훈련 강화와 훈련 범위 확대를 초래하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된다. 북한의 강대강 맞대응이 지속되고, 한일의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심화되며, 일본의 재무장과 정상 국가화를 초래한다. 이는 미국과 일본은 원하는 바이지만 한국에 불리할 것으로 중국은 판단한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중러북과의 관계 악화와 정치적 유연성을 상실하는 위험에 직면한다고 한국 외교를 비판한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동북아 차원에서 미중 간 대만 문제 갈등에 한국과 일본이 개입하고, 남중국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서도 진영화가 형성되면서, 중국은 이러한 집단정치와 신냉전에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북핵 위협 대응 차원에서 중국은 북핵 위협보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확산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고, 이는 동북아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각 국가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핵확산은 역내 전체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중국은 판단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 문제를 겨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력을 통해 북핵 위협을 제대로 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중국은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북핵과 한반도 문제 같은 국제 안보 위협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다른 이슈에 대한 위협 정도와의 비교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림 II-2>에 따르면 중국이 직면한 국제 안보 위협 가운데 팬데믹(41%)을 제외하고 국제 세력의 대만 문제 개입(39%), 미중 대결과 충돌(38%), 대항 이데올로기 진영형성(26%)이 모두 미국과 관련이 있다. 특히 진영화 형성에 대해 중국이 느끼는 국제 안보 위협 정도는 국제 금융위기(24%), 세계대전과 국부 핵전쟁(23%), 데이터 이동 안전(23%), 기후 변화(22%), 국제경제무역 정체(21.2) 등 다른 전통·비전통 국제 안보 위협 정도보다 더 높았다.

<그림 II-2> 2023년 칭화대 여론조사 『중국인의 국제안보관(中国人的国际安全观)』 보고서 중 중국이 직면한 아래의 국제안보 위협의 정도에 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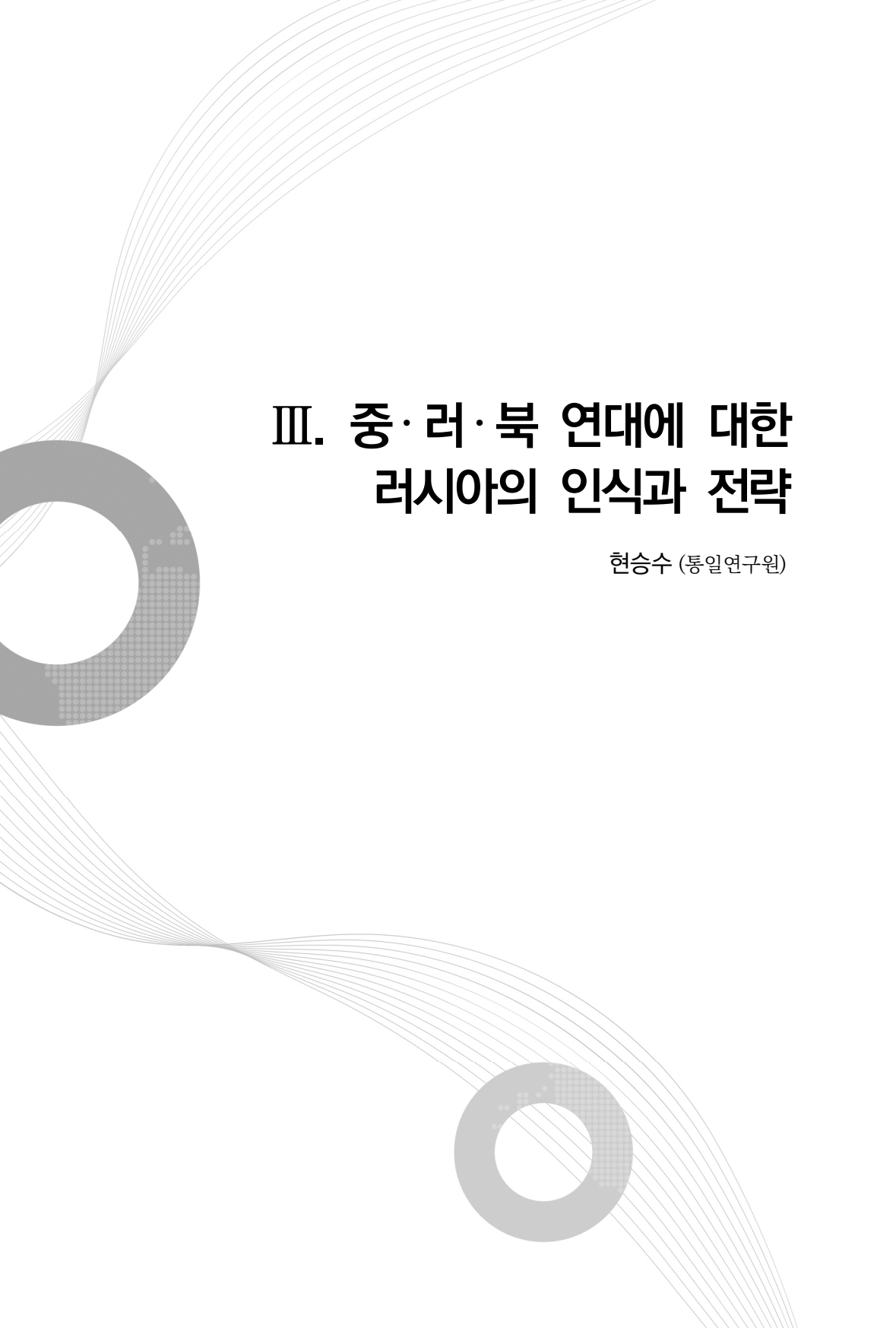


출처: 清华大学战略与安全研究中心, “中国人的国际安全观”民意调查报告.”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중 충돌과 갈등을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진행된다면 진영화에 대한 위협 정도가 높아지는 것보다 미중 대결 및 충돌과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위협 정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북핵 위협 정도가 조사 문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 중국인은 북핵 위협을 아주 낮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핵 위협을 미중 갈등과 진영화의 하위 변수로 취급하면서 세계 금융위기와 세계대전보다 중국의 핵심 이익에 더 큰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는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러북 연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체제와 이를 정당화하는 이념과 역사가 있다. 중러북은 모두 권위주의 독재 정권으로, 시진핑, 푸틴, 김정은 모두 권력 강화를 위해 역사에 호소하고 있다. 중러북 모두 그들의 역사에서 선별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역사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현재 직면한 도전이 크면 클수록, 미래가 불투명하면 할수록 중러북은 과거 그들만의 역사를 소환하여 신화를 만들어 인민들의 지지를 동원하고, 잃어버린 위대함을 되찾겠다고 선언하며, 과거 나약함에 복수하는데 역사의 이야기를 활용한다. 중러북은 이러한 역사 전쟁을 통해 국내 청중에게 미래의 갈등과 영토분쟁을 보는 렌즈를 제공하고, 외세(미국)의 괴롭힘과 공격에 직면하여 결연히 버티는 원동력을 제공한다.⁴⁴⁾ 이러한 역사 전쟁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와 이념에 의해 형성된 정체성과 문화가 제도와 체제보다 더 공고하여 경로 의존의 핵심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중러북이 통제하는 역사로 형성된 정체성과 문화가 때로는 반미 연대와 반서방 및 반제국주의로 응집되면서, 중러북 연대의 차원을 국가 이익을 초월하는 가치와 신념, 혹은 신화의 영역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44) Katie Stallard, *Dancing on Bones: History and Power in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consisting of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Two large, stylized circular shapes are integrated into the design: one on the left side, partially cut off, and another at the bottom right. Both circles are filled with a grid of small dots, creating a textured effect.

Ⅲ. 중·러·북 연대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전략

현승수 (통일연구원)

1.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가. 러시아의 대 중국 밀착

냉전 시기 사회주의 진영 대국이던 중국과 소련은 1960년대부터 이념 논쟁과 국경 분쟁을 겪으며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1970년대 초 미국이 중국과 화해하고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 이유도 중소 갈등을 이용해 소련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됐다.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된 후 소련의 계승 국가로 출범한 러시아연방은 중국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양국 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던 국경 분쟁을 해결했다. 2001년 중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선린우호협력조약은 새롭게 출발하는 중러 관계가 무엇보다 국경 문제 해결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시하면서, 경제와 무역 그리고 테러리즘 대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두 나라는 이후 양자 관계를 단계적으로 격상시키면서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는데,⁴⁵⁾ 여기에는 중러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적으로 돌리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중국과 러시아 사이는 더욱 밀착해 들어갔던 것이다. 서방 전문가들은 중러 관계가 본격적인 밀착 국면에 접어든 시점을 2014년으로 본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로 대응하자, 러시아는 외교·경제적으로 서방을 대체하기 위해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협력의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다.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맞은 2019년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의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렸으며, ‘신시대 전면적 동반자 및 전략적

45) 중러 양국은 관계 정상화 이후,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1991~1994년), 건설적 동반자 관계(1994~1996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1996~2011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2011~2019년)를 거쳐 2019년에는 신시대 전면적 동반자 및 전략적 협력 관계를 선언했다. 현승수, “중·러 정치·군사 협력,” 현승수 외, 『중·러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서울: 통일연구원, 2020), pp. 67~77.

협력 관계'를 선언했다.⁴⁶⁾

중러 밀착이 강화된 데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이에 형성된 긴밀한 개인적 유대도 한몫했다.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2012년부터 범세계적 코로나19 위기로 대면이 불가능해진 2020년 초까지 푸틴과 시진핑은 모두 35차례에 걸쳐 정상 회담을 개최했고, 외국 언론들은 푸틴과 시진핑의 친분 관계를 '브로맨스'로 부를 정도였다.⁴⁷⁾ 뿐만 아니라 중러 양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등 고위급 차원에서도 정기적인 대화 메커니즘이 구축돼 왔다.

이렇듯 두 나라가 협력을 넘어 밀착 행보를 보이는 데에는 국제 질서에 대한 중러의 공통된 이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푸틴과 시진핑은 탈냉전 후 조성된 미국 중심의 단극적(unipolar)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미 다극화된(multipolar) 세계 질서가 구현되고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 질서에 걸맞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는데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미국의 패권을 고집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 또는 권위주의 국가로 비난하면서 군사력을 이용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⁴⁸⁾ 중러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의 패권주의를 겨냥해 공조 의지를 확인해 왔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노골화하고 뒤를 이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러 적대시 정책을 천명하자 이에 맞서 반미 연대와 공동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46) 현승수,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외교·안보 관계 발전과 전략적 의미," 박정호 외, 『미·중·러 전략경쟁 시기 러시아의 대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p. 43.

47) Austin Ramzy and Keith Zhai, "Xi and Putin Rekindle 'Strategic Bromance' in Russia," *The Wall Street Journal*, 2023.3.21., <<https://www.wsj.com/articles/xi-and-putin-rekindle-strategic-bromance-in-russia-5f9f96dd>> (검색일: 2023.11.28.).

48) 현승수,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외교·안보 관계 발전과 전략적 의미," p. 46.

2021년 3월 중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함께 선언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공동 성명은 미·서방이 강요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러는 다르게 해석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가해오는 강압이나 내정간섭에는 중러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⁴⁹⁾ 또한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은 ‘신시대 국제관계와 전 지구적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선언은 양국 간 협력 분야에 한계가 없을 것임과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선포했다.⁵⁰⁾

국제무대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과 공조는 더욱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유엔, 주요20개국정상회의(G20) 등 국제기구에서 대미 견제와 공통의 이익에 기초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잦아지고 있으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권한인 거부권을 공동 행사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 또 상하이협력기구나 브릭스와 같은 미국이 배제된 국제기구를 중러가 함께 설립·주도하고 이들 기구의 역할 강화와 확대를 통해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에 도전해 왔다.

49)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некоторым вопросам глоб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1.3.23., <https://archive.mid.ru/ru/foreign_policy/news/-/asset_publisher/cKNonkJE02Bw/content/id/4647776?TSPD_101_R0=08765fb817ab20007246dc3fc037c9276ee1590a3eb3065973ca4521be910261bf5ca0db1760bdc08f87e500e1430006ae56ce2d756d36f8866cdf93046ca9f521fef62a3139b4753caa1d99eab69e927590efa7f55990f8ca96b79b7aa8eb4> (검색일: 2023.12.1.).

50)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вступающих в новую эпоху, и глобальном устойчивом развити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2022.2.4., <<http://kremlin.ru/supplement/5770>> (검색일: 2023.12.1.).

중러 두 나라의 협력은 특히 군사 분야에서 미국과 서방에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군사 협력 분야는 군 인사 교류와 합동 훈련은 물론 정보 공유와 무기 시스템 공동 개발까지 폭넓은 영역을 포괄한다. 2021년 11월 양국은 군사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2021~2025년 군사 협력 로드맵'에 서명했다.

특히 주목할 분야는 무기·군사기술 거래와 양국 합동 군사 훈련이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국방 예산의 축소로 인해 군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1996년 중국이 소련제 구축함 2척을 수입한 것을 시작으로 러시아제 무기와 군사 장비가 대량 중국에 수출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무기를 허가 없이 역설계해 자체 무기를 개발하자 러시아는 한때 중국과의 방산협력을 대폭 축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후, 서방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하자,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리고 중국이 원해도 건네주지 않던 S-400 방공 시스템까지 제공했다.⁵¹⁾ 2019년에는 중국의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러시아가 지원할 계획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세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⁵²⁾

한편, 중러 양국은 2005년부터 3개의 틀 속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그 수준과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첫째 틀은 상하이협력기구 훈련의 일환인 '평화 사명 훈련'이다. 이 훈련에는 중·러 이외에도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들이 참가하며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둘째 틀은 2012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합동 해상 훈련 '해상 연합'이다. 한반도 주변 동해와 서해, 지중해와 발트해 등이 훈련 장소로 지정돼 왔으며, 해가 갈수록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세 번째

51) 현승수,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외교·안보 관계 발전과 전략적 의미," pp. 61~63.

52) "푸틴 "러시아, 중국에 미사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원," 『연합뉴스』, 2019.1 0.4.,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4040600009>> (검색일: 2024.1.16.).

들은 러시아가 자국 군관구 차원에서 실시하는 4개 훈련(남부, 서부, 동부, 중부)에 중국군이 참가하는 경우다. 이들 훈련 외에도 증리는 2019년 7월부터 한반도 주변과 동중국해 상공에서 군용기를 동원한 공동 경비 비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동해에서 양국 해군이 참여한 ‘해상 연합’도 시작했다. 특히 중·러 군용기가 훈련 과정에서 KADIZ를 무단 침입하는 회수가 늘고 있어 한국을 긴장시키고 있다.⁵³⁾

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러 관계

이 같은 중러 관계에 위기가 닥친 것은 2022년 2월이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전 세계가 러시아를 규탄했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대러 금융·경제 제재가 시행되었다. 러시아의 도발이 중러 관계를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서방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다. 하지만 중국은 유감 표명과 협상 촉구와 같은 중립적인 수사를 사용하면서 대러 비판을 자제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유엔 총회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 표결에도 기권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침공 직후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나눈 전화 통화 속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확장하고 러시아의 안보 우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서방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⁵⁴⁾ 전쟁이 시작되고 1년 반이 지났지만 중러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과 서방을 의식한 듯 더욱 밀착해 들어가는 모양새다.

53) 중러 합동 군사 훈련의 종류와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현승수,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외교·안보 관계 발전과 전략적 의미,” pp. 69~76.

54) “왕이 중국 외교부장 “나토 동진에 따른 러시아 안보 우려 이해”, 『KBS 뉴스』, 2023.2.2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03429>> (검색일: 2023.11.28.).

2023년 3월 시진핑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 짓고 열흘 만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두 정상은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의 3연임을 축하했고,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2024년 3월 예정된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이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는 덕담을 건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실질적으로 중단 또는 종식시킬 수 있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 지켜보던 서방 국가들의 기대와는 달리 푸틴과 시진핑은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해 양국의 반미 연대를 재확인하고 미국과 서방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⁵⁵⁾

10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했다. 베이징에서 두 정상은 대면 회담을 포함해 전례 없이 긴 12시간 30분 동안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⁵⁶⁾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양국의 발전과 국제적 정의 수호, 세계 공동 발전에 힘을 합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양자 무역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공동으로 설정한 2000억 달러(한화 약 270조 원)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푸틴 대통령도 “중국은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성공하고 있다”고 추켜세우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 거래액은 정말 인상적이다. 중국과 폭넓은 상호작용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푸틴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시 주석에게 자세히

55) 중·러 공동 성명의 핵심 요지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중·러 정상 공동성명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23.3.22., <<https://www.yna.co.kr/view/GYH20230322000200044>> (검색일: 2023.11.29.).

56) РСМД, “Интервью Посла России в Китае Игоря Моргулова газете Global Times,” 2023.12.1., <https://russiancouncil.ru/analytics-and-comments/comments/intervyu-posla-rossii-v-kitae-igor-ya-morgulova-gazete-global-times/?sphrase_id=126708824> (검색일: 2023.11.29.).

알렸다”라면서 “미국과 서방이 공동으로 러시아를 위협하는 것은 중러 상호작용만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⁵⁷⁾ 두 정상의 발언은 서방이 러시아에 가하고 있는 강도 높은 금융 경제 제재가 러시아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데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중국이 경제 협력을 통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금융·경제 제재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에너지 협력 강도를 높여 왔다. 그 결과, 중국은 서방 기업들이 대거 철수한 러시아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중국 제조업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도 상승했다.⁵⁸⁾ 2022년 말, 중러 간 무역액은 1900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29% 증가해 러시아는 중국의 교역국 가운데 가장 큰 성장폭을 보인 나라로 기록됐다.⁵⁹⁾ 또한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2023년 1~7월 중국의 대러 무역 규모가 1340억 달러(한화 약 179조 6940억 원)로 집계됐다면서, 이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36%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대러

57) “바이든 겨냥, 시진핑 “일방제재 반대” 푸틴 “타인 존중을,” 『동아일보』, 2023.10.19.,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1019/121737112/1>> (검색일: 2023.12.1.).

58) 2020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아오던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산업장비, 식품산업 등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다. 경제정보제공업체 CEIC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상반기 러시아에 34만 1,00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중국 수출 차량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3.7%에서 11.4%로 수직 상승했다. KITA 한국무역협회, “중국, 올해 대러 수출액 73% 급증…“러시아 경제 지탱,” 2023.8.22.,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JSESSIONID_KITA=E9FA3D5F57C163064BE5BF642109B218.Hyper?pageIndex=1&nIndex=77555&sSiteid=2> (검색일: 2023.11.25.). 현재,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1/3을 중국 자동차가 점유하고 있다.

59) “Торговля России с Китаем достигла рекорда,” РБК, 2023.1.13., <<https://www.rbc.ru/economics/13/01/2023/63c0ffb79a79474aaf45862d?ysclid=lh341piet7202291603>> (검색일: 2023.12.2.).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전체 수출 규모가 5%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신문은 러시아가 독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을 제치고 중국의 7위 교역 상대국으로 올라섰다고 보도했다.⁶⁰⁾

중러 간 자국 통화 무역도 힘을 받는 추세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해 왔다. 중국은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구해 왔고,⁶¹⁾ 러시아는 금·통화 보유고에서 금과 중국 위안화의 비중을 점차 늘렸다.⁶²⁾ 더 나아가 2019년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결제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거래에서 달러화 사용을 줄였다. 그 결과,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러시아산 가스의 공급 대금은 이미 ‘절반은 위안화, 절반은 루블화’라는 원칙에 따라 결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중러 간 위안화 상호 결제 비율은 0.5%에서 16%로 32배 증가했고, 2023년 초에는 거래의 34%가 루블로 결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⁶³⁾

60) KITA 한국무역협회, “중국, 올해 대러 수출액 73% 급증…“러시아 경제 지탱.” 한편, 주중 러시아 대사인 모르굴로프(Igor Morgulov)는 2023년 1~10월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무역 매출액이 27.7% 증가한 1960억 달러를 넘어섰 다면서 기록적인 지표라고 말했다. РСМД, “Интервью Посла России в Китае Игоря Моргулова газете Global Times.”

61) 2016년부터 IMF는 위안화를 준비 통화 바스켓에 포함시켰으며, 2021년에는 위안화가 일본 엔화를 제치고 4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로 부상했다. А. Долженков, “Рубль идет на гаран,” *expert.ru*, 2022.3.27., <<https://expert.ru/expert/2022/13/rubl-idet-na-taran/>> (검색일: 2023.11.27.)

62)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2년 초 시점에서 러시아 은행은 위안화로 표시된 중국 국채만 1400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ussia May Own \$140 Billion Worth of Chinese Bonds, ANZ Says,” *bloomberg.com*, 2022.3.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3-02/russia-may-own-140-billion-worth-of-chinese-bonds-anz-says?utm_medium=cpc_search&utm_campaign=NB_ENG_DSAXX_DSAXXXXXXXXXXX_EVX_XXXX_XXX_Y0469_EN_EN_X_BLOM_GO_SE_XXX_XXXXXXXXXX&gclid=CjwKCAiAqY6tBhAtEiwAHeRopeeTlwuze__h1kt-hR_zLTsfU2sRNTR2iyQHdSVPQspGbFERb0bn0hoCnpQQAvD_BwE&gclid=aw.ds> (검색일: 2023.11.2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이 얻은 반사이익은 미국과의 경제 갈등으로 고심이 깊어진 중국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로부터 싼 가격에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가스의 대 중국 공급을 늘리는 협정도 속속 체결되고 있다.

한편, 군사 협력 분야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러 관계를 이격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 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군사 공동 프로젝트 참여, 기술 공유 등을 통해 러시아가 중국군 공급망에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그들은 이것이 러시아 군수산업 현대화를 위한 최선이며, 중국 군사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러시아 기술이 쓸모없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⁶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러한 구상은 러시아에서 통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러시아 내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국 파트너에 개방하고, 연구 시설을 중국 파트너와 통합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 기업인 ‘화웨이(Huawei)’의 경우 미국의 제재 이후 러시아 내 연구 인력을 세 배로 확장하기도 했다.⁶⁵⁾ 현재 러시아는 중국에 Su-26/27/30MKK/35 전투기, Mi-171, Ka-32 및 Ansat 헬리콥터, Il-76 수송기 및 Il-78 급유 탱커를 공급하고 있으며, 중러 양국의

63) “Доля юаня в экспорте России взлетела в 32 раза в 2022 г.,” *riamo.ru*, 2023.3.11., <<https://riamo.ru/article/624158/dolya-yuany-a-v-eksporte-rossii-vzletela-v-32-raza-v-2022-g?ysclid=lh-26k57s18896650417>> (검색일: 2023.11.27.).

64) Alexander Gabuev, “What’s Really Going on Between Russia and China,” *Foreign Affairs*, 2023.4.12.,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whats-really-going-between-russia-and-china>> (검색일: 2023.12.4.).

65) Lauren Dudley, “Part Two: Huawei Enlists Russian Talent and Technology to Ensure Future Innovatio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0.10.28., <<https://www.cfr.org/blog/part-two-huawei-enlists-russian-talent-and-technology-ensure-future-innovation>> (검색일: 2023.12.4.).

‘공동 비전략 미사일 방어’의 일환으로 S-300PM1 및 S-400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Tor-M 및 Tunguska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Buk를 중국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⁶⁾

양국 간 합동 군사 훈련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 국방대학 중국군사문제연구센터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2022년에만 모두 6차례의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는 20년 만에 가장 많은 횟수였다. 또한 중국군이 2022년 외국군과 진행한 합동 군사 훈련 가운데 2/3가 러시아군과 진행한 훈련이었고, 중러 합동 군사 훈련 가운데 5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실시한 것이었다.⁶⁷⁾ 시야를 동아시아와 한반도 주변으로 돌려보면, 중러는 2023년 6월 한반도 주변 동해와 동중국해, 서태평양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벌였으며, 7월에는 러시아 해군 태평양함대 소속 호위함 등이 참여한 연합 훈련 ‘북부연합-2023’을 실시했다.

다. 러시아의 대 중국 의존 심화

최근까지 서방 학자들은 중러 관계를 ‘정략결혼’에 비유하곤 했다.⁶⁸⁾ 4,000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한 중러 사이에는 역사와 지정학에 기인한 갈등 요소가 산적해 있지만,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 서로 양보·인내하며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옛 소련권 국가들을 규합해

66) Василий Иванов, “Максимальное сближение без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оюза,”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23.12.21., <https://nvo.ng.ru/gpolit/2023-12-21/1_10_11_1237_china.html> (검색일: 2023.12.23.).

67) “지난해 중·러 합동군사훈련 6차례…20년사이 최다,” 『KBS뉴스』, 2023.7.1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25696>> (검색일: 2023.12.8.).

68) 예를 들어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Michal Lubina, *Russia and China: A political marriage of - stable and successful* (Oplaen, Berlin, Toronto: Barbara Budrich, 2017).

러시아 중심의 거대한 지역 통합을 꾀하는 푸틴 대통령의 유라시아경제연합 구상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세계를 중국과 연결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정책이 상호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서방 학자들로부터 다수 제기되었다. 미국 패권 종식과 다극화 세계질서 실현을 위해서는 중러가 협력·공조 하지만,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면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표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일부 서방 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 근거로 두 나라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한다.⁶⁹⁾ 그들은 두 나라의 군사 협력 관계가 상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는 여전히 양국이 상호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격차를 두 나라가 평등한 파트너가 될 수 없는 원인으로 꼽는 분석도 있다.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과 견줄만한 G2 국가로 부상한 데 비해, 러시아는 중국 경제력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국 관계에서 중국의 우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은 러시아의 대 중국 종속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⁷⁰⁾

하지만 서방의 이러한 시각이 희망론(wishful thinking)에 치우친 것일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서방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기적인 이익에 따라서만 추동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러 관계를 ‘정략결혼’으로 비유했던 일부 서방

69) “Report to Cong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USNI News*, 2023.9.14., <<https://news.usni.org/2023/09/14/report-to-congress-on-the-relationship-between-china-and-russia-2>> (검색일: 2023.12.3.).

70) “Russia’s potential subordination to China poses threat,” *NIKKEI Asia*, 2022.5.11., <<https://asia.nikkei.com/Spotlight/Comment/Russia-s-potential-subordination-to-China-poses-threat>> (검색일: 2023.12.3.).

학자들 가운데는 최근 들어 두 나라의 밀착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 예측 이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경계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이들도 있다.⁷¹⁾

주중 러시아 특명전권대사인 모르굴로프는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러 관계의 특징을 성숙함, 안정성, 깊은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 서로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한 배려와 상호 지원이라고 지적하고, 두 나라 사이를 흠잡으려는 서방의 '흑색선전'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양국 간의 강력한 유대가 세계 및 지역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두 나라 정상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군사·정치적 동맹도 아니지만, 새로운 도전에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맹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⁷²⁾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서방과 결별을 선언한 러시아에게는 중국의 후원이 절실하다.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양국 간 노정된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중국에 밀착해 들어가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으며, 이는 러시아의 대 중국 의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

71) Richard Weitz, "Assessing Chinese-Russian Military Exercises: Past and Future Trends," Center for Strategic&International(CSIS), 2021.7.9., pp. 1~6, <<https://www.csis.org/analysis/assessing-chinese-russian-military-exercises-past-progress-and-future-trends>> (검색일: 2023.11.19.); Alexancer Gabuev, "As Russia and China draw closer, Europe watches with foreboding,"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1. 3.19., <<https://carnegiemoscow.org/commentary/84135>> (검색일: 2023.11.20.).

72) РСМД, "Интервью Посла России в Китае Игоря Моргулова газете Global Times."

갈 것이다. 또한 2024년 3월로 예정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이 출마하여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극화 세계 질서 실현과 글로벌 반미 연대 구축을 골자로 하는 러시아의 대외정책 노선은 당면 유지 또는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미국과의 경쟁을 지속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푸틴의 외교 노선에 공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러의 밀착과 제휴가 더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

가. 러시아의 대 북한 관계 추이

냉전 시기 소련과 북한은 동맹 관계였다. 소련은 북한이 수립될 당시 김일성을 지원했으며, 이후 소련이 지도상에서 사라진 1991년까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정치 후원국이었다. 북한에게 있어서 소련은 중국을 능가하는 경제 파트너이기도 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의 대외 교역량 가운데 1/4, 시기에 따라서는 절반까지를 소련이 차지할 정도였다. 1990년에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53.3%에 달했는데 이는 미화로 계산하면 22억 달러였다.⁷³⁾ 소련 시기 양국의 경제 관계는 전적으로 소련이 제공하는 특혜 가격과 부채 탕감에 기초해 있었으며, 더욱이 소련은 저렴한 가격에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왔다. 1990년대 초 시점에서 소련의 원조로 북한에 세워진 다양한 산업 시설들은 북한 전기의 70%, 화학 비료의 50% 그리고 흑색 광물의 40%를 담당하고 있었고, 북한의 알루미늄은 전적으로 소련 기술자들의 손에 의해 생산되고 있었다. 또 북한의 대표적인 70개 대형 공장들 역시 소련의 원조와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었

73) 이정균·김범환, 『'북·러 관계' 70주년 평가와 전망』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p. 5.

다. 한마디로, 소련 시기 소북 관계는 거의 전적으로 소련의 온정주의(paternalism)에 기초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⁷⁴⁾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신생 러시아연방이 탄생하면서 러시아는 친서방 외교 노선의 일환으로 북한보다 남한을 중시하는 정책을 떠나갔고,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와해됐다. 두 나라 사이의 경제 관계 역시 붕괴 직전 상황까지 내몰리면서 그동안 추진돼 왔던 양국 간 공동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중단됐다. 더 이상 자국 화폐로 결제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무역량도 급감했다. 1995년 양국 교역액은 8300만 달러에 그쳤다.⁷⁵⁾

사실 러시아연방 초대 대통령인 엘친(Boris Yeltsin) 집권기에도 러북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국 간 협의는 꾸준히 유지됐고 인프라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도 논의되고는 했다. 하지만 러북이 경제 협력을 시동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았으며, 러시아와 북한 모두 각자 직면한 대내외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협력 안건은 종잇장에 불과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러북 관계가 복원된 것은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였다. 그해 2월 당시 대통령직 대행을 맡고 있던 푸틴은 북한과 우호, 선린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두 나라가 무역·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며, 이를 위해 호의적인 법, 재정 및 경제적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련 당시 양국이 체결했던 동맹 조약과는 달리 군사 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들어있지 않았다.⁷⁶⁾

74) 냉전 시기 북한과 소련의 경제 관계의 상세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조명철,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경제에 주는 시사점』(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75) 이정균·김범환, 『‘북·러 관계’ 70주년 평가와 전망』, p. 5.

76) 소련은 1976년 북한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 조약은

선거를 통해 정식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은 집권 개시 직후인 2000년 7월 평양을 방문했다. 그가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에 방문한 나라들 가운데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러북 관계를 생각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푸틴은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가 상실했던 전략 자산들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북한은 그에게 회복해야 할 지정학적 자산이었던 셈이다. 푸틴의 평양 방문에 뒤이어 2001년과 2002년에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양국 정상회담 과정에서 체결된 조약에 따라 러북 관계의 새로운 법적 기반이 마련됐는데, 당시 작성된 다양한 문서들은 러북 관계가 과거의 정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협력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01년 8월 4일 발표된 러북 간 모스크바 선언의 내용이다. 선언문 안에는 “한반도의 북과 남을 러시아, 유럽과 연결하는 철도 운송 회랑의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⁷⁷⁾ 이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른바 ‘남북러 삼각 경협’이 이때부터 구상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기부터 남북한을 잇는 TKR(Trans-Korean Railroad)과 시베리아횡단철도인 TSR(Trans-Siberian Railroad)을 연결하는 구상과, 러시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남한에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 그리고 러시아산 전기를 한반도에 제공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들 남북러 삼각 경협 프로젝트는 최근까지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서 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었으며,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는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로 러시아는 인식해 왔다.

러북 경협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계기는 201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다. 당시 김정일은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순방

소련 해체 이후 연장되지 못한 채 1996년 만료됐다.

77) “북-러 ‘모스크바 선언’ 전문,” 『통일뉴스』, 2001.8.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6>> (검색일: 2023.10.24.).

하고 올란우데에서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러시아가 한반도를 중단하는 가스관 건설을 본격적으로 제의해 오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러시아 최대 국영 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Gazprom)이 남한의 한국가스공사(KOGAS) 그리고 북한의 석유산업성을 상대로 가스관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했고 남북한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교섭은 중단됐고 남북러 가스관 사업도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한편, 이즈음부터 러북 간 경제 관계도 악화하기 시작했다. 2011년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했다.⁷⁸⁾ 러시아 정부는 모처럼 점화된 러북 경제의 모멘텀을 잃지 않기 위해 대담한 결정을 내린다. 당시 북한은 핵 개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고, 따라서 투자 환경이 대단히 열악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기업인들이 북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심산으로 러북 간 경제 발전을 더디게 하는 최대 장벽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빌려 간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한 것이다. 2012년 9월 러시아와 북한은 옛 소련 시기에 북한이 빌려 간 채무의 90%(미화 110억 달러)를 청산하는 협정에 합의했고, 2014년 5월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협정은 최종 마무리됐다.⁷⁹⁾

러시아가 북한이 진 대부분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한 결정도 파격적이지만, 나머지 돌려받아야 할 채무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러 경제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러시아의 대북 전략이 어디에

78) KOTRA 글로벌정보본부, “2011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자료 12-018, 2012.5.30., p. 8, <<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ef-f396-018a-e053-b46464899664>> (검색일: 2023.11.19.).

79) 현승수, “북·러 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22, 2014.12.31.), p. 3,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684&nav_code=mail674786581> (검색일: 2023.12.26.).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대북 인도 지원과 남북러 삼각 경협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이며,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을 드러내는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즉, 러시아는 북한이 정권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급변 사태 또는 체제 붕괴 상황에 직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또한 한반도의 안보를 자국의 경제와 연계시킴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챙기고 동시에 한반도 통일의 증재자로서 러시아의 이미지도 구축하고자 한다.

러시아 정부의 파격적인 부채 탕감과 일련의 노력들에 힘입어 러북 경제 관계는 2013년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 해에 북한의 대러 투자는 전년 대비 2배, 러시아의 대북 투자는 70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2014년에는 양국 간 고위급 인적 교류가 눈에 띄게 늘면서 러북 간 밀월 관계에 관한 보도가 세계 언론에 오르내렸다. 그해 6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6차 러북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정부 간 위원회에서는 두 나라 무역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는 방안, 북한 내 특별경제지대 구상, 북한 영내에서 러시아 기업들이 탄화수소 채굴을 위한 지질 조사를 실시하고 광물(특히 비철금속과 희토류) 매장지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⁸⁰⁾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 실험에 이어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 상황을 위기로 몰고 가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안 2270호를 결의했다. 북한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강도 높은 결의안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 그런데 결의안이 완성되어 최종 채택을 앞둔 시점에서 러시아가 예외조항 추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예외조항은 북한 라진항을 통한 외국인 석탄 운송의 허용, 북한 민항기의 북한 밖 급유 허가,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rea

80) 이정균·김범환, 『'북·러 관계' 70주년 평가와 전망』, p. 13.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KOMID)의 러시아 주재 대표에 대한 제재 제외 등 3개로,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극동 개발은 푸틴 대통령이 국정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 더 나아가 남북러 삼각 경협과도 연계돼 있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한창이던 2016년 1월 갈루시카(Alexander Galushika) 러시아 극동 개발부 장관이 북한과의 무역량을 2020년까지 1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며, 라진·하산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대북 제재에 얽힌 러시아의 복잡한 속사정을 설명해 준다.⁸¹⁾

러시아가 요구한 대북 제재 예외조항은 관철되었으나,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심각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 갔다.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다. 러시아 스스로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경제적 고충과 외교적 고립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2월 미북 간 하노이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후 그 해 4월에 열린 러북 정상 회담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 같은 원론적 입장 표명 이상의 선물을 김정은에게 안겨주지 못했다. 두 나라 간 교역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2020년 1월 북한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러북 국경을 폐쇄하면서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북한이 국경을 개방한다 해도 러북 관계가 다시 활성화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았다.

81) “[Russia 포커스] 북 철도 3500km 20년간 재정비 러 “북 천연자원 목록 작성중,” 『중앙일보』, 2014.12.5.,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613737#home>> (검색일: 2023.11.17.).

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대북 인식 변화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가 일으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북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행동과 입장을 무조건 지지함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소집된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러시아 규탄 결의에 북한은 반대표를 던졌다. 러시아의 우방이던 중국과 인도는 기권했으며, 시리아와 벨라루스 등 소수의 친러 국가만이 북한과 함께 러시아 규탄을 반대했다. 북한의 친러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2년 4월 러시아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하기로 한 유엔 긴급특별총회의 결정에도 북한은 반대하고 나섰다. 2022년 9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4개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결정을 내리자 북한은 이를 승인했으며, 2023년 1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한 전호(참호)”에 서 있다고 말했다.⁸²⁾

미·서방과의 관계 단절과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켜 가던 러시아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2023년 7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평양 방문과 북한 전승절 기념 열병식 참석, 9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10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은 러북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었다.

특히 두 나라가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작지 않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안내를 받으며 북한제 무기를 시찰한 점, 러시아 극동 지방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Vostochny

82)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3.1.27.

Cosmodrome)를 회담 장소로 선택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에 임하면서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기 위해 이곳을 회담 장소로 선택했다고 말한 점, 김정은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수행단 속에 북한군 최고 수뇌부가 거의 전원 포함되어 있는 점, 김정은 일행이 5일 동안 러시아 극동 지방의 러시아 군 주요 시설과 전투기 공장 등을 시찰한 점 등이 러북 간 군사 협력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러시아의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추동되었다.

첫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과 소모전 양상을 띠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과 재래식 무기 및 군수품 제공이 필요하다. 미국의 언론과 정부는 이미 2022년 중반부터 북한제 탄약과 무기의 러시아 제공 및 북한 병력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2023년 들어서는 실제로 북한의 탄약과 포탄, 기타 군수품이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증거 위성사진 등을 공개했다. 러시아의 군사 분석가이자 국방 잡지 편집장인 이고르 코로첸코(Igor Korotchenko)는 9월 13일 러시아 국영 RIA 노보스티(RIA Novosti)와의 인터뷰에서 특별 군사작전(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렇게 부름)이 시작된 이후 군사적, 정치적 상황이 변화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을 “상호 이익이 되고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모든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해야한다”고 제안했다.⁸³⁾ 코로첸코는 북한의 탄약 등 군수 물자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은 다양한 구경의 일류 포병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83) “Эксперт: Россия, КНДР и КНР могли бы совмест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вызовы в АТР,” *РИА Новости*, 2023.9.13., <<http://ria.ru/20230913/vyzovy-1896107828.html>> (검색일: 2023.11.27.).

구경과 사용되는 탄약의 명명법 측면에서 러시아 시스템과 완전히 호환된다. 또한 북한은 로켓포, 특히 600mm 구경의 다연장로켓포(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MLRS)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북한은) 지상군을 위한 군사 장비 제작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⁸⁴⁾

코로첸코는 북한의 주요 관심사는 우주 협력이며, 러시아는 북한을 위해 다양한 목적의 위성 공동 설계 및 발사, 북한 영토에 위성 데이터 수신 및 처리 센터 건설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러시아로부터의 식량과 에너지 공급도 북한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미국과 서방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북한제 군수 물자의 대러 제공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포탄과 탄약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러시아 군사 기술의 북한 이전 등도 군사 협력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실태 파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불투명한 군사 거래 자체가 러시아가 노린 대적 심리전의 일환일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글로벌 반미 연대를 구축하려는 러시아에게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점차로 서방, 특히 미국과 관계가 악화해 왔으며,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이후, 미·서방과 러시아 관계는 건잡을 수 없이 벌어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한 달 여가 지난 2023년 3월 30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을 개정하고 서방과의 문명적 단절, 러시아의 독자적 세계관 추구, 미국 패권 종식과 다극화 세계 질서 실현을 위한 반미 연대 구축

84) 위의 글.

등을 천명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과의 ‘성전’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호언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및 반미 성향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과 연대감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⁸⁵⁾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가운데 러시아를 무조건 지지하고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탄약과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북한이 러시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존재다. 미국과 ‘외로운’ 싸움을 하던 북한에게도 러시아가 후원 세력으로 복귀한 사실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성과일 수 있다. 러시아 관·학계에서는 북한이 오랜 기간 제재를 버텨오면서도 미국을 상대로 핵 위협을 감행하는 ‘대단한’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러시아 언론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다극화 질서 실현을 위한 반미 반서방 투쟁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무조건’ 지지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하며, 대북 제재 무력화 등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성의에 호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셋째, 러시아와 북한의 권위주의 체제가 유사해지고 있는 사실도 러북 밀착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23년 동안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해 온 푸틴 대통령은 2024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를 결정했으며, 무난하게 재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러시아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푸틴이 2024년 집권 5기를 시작하고 6년 후 연임에 성공한다면, 2036년까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 이른바 ‘보편적 가치’를

85)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В.Путиным 31 марта 2023 г.)”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3.3.31., <<https://www.mid.ru/ru/detail-material-page/1860586/>> (검색일: 2023.12.1.).

타국에 강제하지만 이는 서방의 기준일 뿐이라면서, 러시아는 러시아만의 독특한 문명과 문화에 기반한 러시아식 민주주의와 가치가 중요하다고 항변해 왔다. 푸틴이 말하는 러시아식 민주주의와 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논하기는 어려우나, 미국과 서방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 러시아가 개인 독재 국가 또는 강성 권위주의 국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서방 전문가들은 이를 러시아의 ‘북한화’로 부르며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솔로비요프(Alexander Solovyov)는 최근의 러북 밀착을 평가하면서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담론적 수준에서 오늘날 모스크바와 평양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에 맞서는 투쟁 의지도 유사하지만, 주권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한다는 생각도 닮았다. (러시아와 북한의) 대외 정책 담론의 또 다른 공통된 특징은 국가주의, ‘포위된 요새’의 이미지, 그리고 정치적 결정의 원천으로서 국가 지도자의 의심할 수 없는 권위다. ... 또 하나는 무력 과시를 통해 대결 의지를 표출하면서 국제 문제를 악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⁸⁶⁾

이상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현재 조성되고 있는 러북 밀착 관계는 서방 언론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장기적일 수 있다. 러시아가 당장 필요한 북한제 무기만 건네받기 위해 단기 거래 차원에서 북한에 접근

86) “Страна, живущая в трёх эпохах: к 75-летию КНДР,”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2023.9.9., <<https://globalaffairs.ru/articles/k-75-letiyu-kndr/>>, 재인용: 현승수,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30, 2023.9.14.),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15989&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4.1.30.).

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더라도 러북 관계는 충분히 진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 러·북 관계의 제약 요인

그런 한편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양자 관계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무엇보다 대북 제재를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현행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동의해 결의한 것이다. 러시아가 의심받고 있는 북한과의 군수 물자 거래 및 군사 기술 이전은 명백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며, 러시아 측도 이를 의식한 듯 신중한 모습이다. 푸틴 대통령은 9월 13일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국영 로시야 1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력에는) 특정한 제한이 있다. 러시아는 이 모든 제한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은 이어 “현재 규정 틀 내에서도 (러북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⁸⁷⁾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러시아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도 크다. 러시아가 ‘불량국가’인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할 경우,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비확산체제를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인해 러시아의 대북 제재 위반이 확실해진다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더불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러시아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것이다.

북한 경제를 살려보려는 러시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도 미지수

87) “푸틴 “국제제재 틀 내에서 北과 군사기술 협력 가능”, 『조선일보』, 2023.9.14.,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9/14/OGBTQZAWDRFOFNBH2QH44677ZY/> (검색일: 2023.11.21.).

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러북 정상회담의 만남이 있던 두 달 후, 평양에서는 제10차 러북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정부 간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9차 위원회가 201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됐다가 러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재개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 내 광물 탐사와 관광 재개로부터 교육과 체육 교류까지 광범위한 주제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협력 안건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양자 간 합의 사항도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러시아 내 전문가들은 러북 간 경제적 협력 기반이 취약하면 정치적 신뢰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적해 왔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 IMEMO)의 올레그 다비도프(Oleg Davydov) 선임연구원은 러북 경제 협력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지원 비용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 또는 '원조' 방식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전통적인 북한 수출품(석탄, 철광석, 섬유, 생선 및 해산물)에 거의 관심이 없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던 시기에도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었다.”⁸⁸⁾

88) Олег Давыдов, “Россия, КНДР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МЭМО РАН*, 2023.10.23., <<https://www.imemo.ru/publications/policy-briefs/text/russia-north-korea-and-security-on-the-korean-peninsula>> (검색일: 2023.10.25.).

3. 중·러·북 연대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

가. 중·러·북 연대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최근 국내외에서 중러북 연대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2023년 7월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합동 군사 훈련 가능성에 대해 묻는 러시아 언론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직후부터였다. 2023년 9월 4일 인테르팍스(Interfax)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쇼이구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왜 안되겠는가? 북한은 우리 이웃이다. 러시아의 오래된 속담에 이웃은 선택할 수 없기에 이웃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다. 물론 논의 중이다. ... 우리는 중국 동료들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해군 부대의 전략 폭격기 합동 순찰을 하고 있다.⁸⁹⁾

이 발언 속에서 쇼이구는 중러북 합동 군사 훈련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과의 훈련을 언급함으로써 마치 중러북 합동 군사 훈련도 가능하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같은 날,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쇼이구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 당시 중러북 연합 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를 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⁹⁰⁾ 이보다 이틀 전인 9월 2일에는 마체고라(Alexander Matsegora) 북

89) “Шойгу сообщил, что обсужд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совместных учений с КНДР,” *INTERFAX.RU*, 2023.9.4., <<https://www.interfax.ru/russia/919195>> (검색일: 2023.12.1.).

90) “‘한미일 대 북중러’ 군사훈련 현실화하나…‘러, 김정은에 공식 제의,’” 『한겨레』, 2023.9.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07077.html>> (검색일: 2023.12.1.).

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도 참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이 알려졌다. 그는 타스(TAS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아시아의 ‘파트너’들이 연합 훈련을 지속하면서 반 중국, 반 북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반 러시아적 어조도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일부 공동 대응 조치는 매우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⁹¹⁾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중러북의 공동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이후에도 러시아 고위급 관료들의 발언 속에서 중러북의 공동 행동 또는 공동 대응 필요성이 종종 언급되고 있다. 2023년 9월 평양을 방문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한 뒤 단독 기자회견에서 “이곳(한반도)에서 미국·일본·한국의 군사 활동 증대와 핵을 포함한 미 전략 인프라의 한반도 이전 노선 등이 우리와 북한 동료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라면서 러시아는 중국, 북한과 함께 한미일이 추진하는 “비건설적이고 위험한 노선”에 반대해 “긴장 완화와 긴장 고조 불허용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긴장 고조에 대한 대안을 건설적으로 제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⁹²⁾

또한 쇼이구 국방장관은 중러북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지만 중러 “동맹”이 유지국(有志國)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해 중러북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2023년 10월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상산 포럼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동맹”에 가입할 준비가 된 다른 국가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쇼이구는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의 국가 관계 모델은 모범적이며,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게도 점차 매력적으로

91) “Посол РФ в КНДР: санкции никоим образом не влияют на отношения Москвы и Пхеньяна,” TASS, 2023.9.2., <<http://tass.ru/interviews/18634669>> (검색일: 2023.12.1.).

92) “평양 간 러 외무 “북중러, 전제조건 없는 한반도 안보협상 지지,” 『중앙일보』, 2023.10.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0679#home>> (검색일: 2023.11.21.).

비친다고 주장하면서, 중·러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심 있는 국가들과 군사 장비 제공, 합동 훈련을 포함한 군사 및 군사 기술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⁹³⁾

한편, 러시아 내 국제정치와 군사 전문가 그룹 안에서도 반미를 축으로 한 중러북 연대의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인 빅토르 리토프킨(Viktor Litovkin)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쇼이구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동맹국 수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쇼이구 장관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 및 베트남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와 브릭스 가입을 통해 이 지역에서 우리의 파트너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⁹⁴⁾

러시아에서 저명한 제재 전문가로 평가받는 비탈리 소빈(Vitaly Sovin)은 모스크바와 평양, 베이징 간의 전략적 협력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하려는 NATO의 조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호주에 핵 잠수함을 제공한 사실과 호주, 미국, 영국이 오크스(AUKUS) 블록을 만든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핵확산금지 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의 목표와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소빈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결성한 쿼드(Quad)는 이미 ‘반 중국 NATO’로 낙인 찍혔고, 캐나다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4자 협력 체제를 제안했으며, 서울과

93) “Эскалация растёт. Шойгу: курс Запада ведёт к ядерной войне.”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2023.11.1., <https://aif.ru/politics/world/eskalaciya_rastet_shoygu_kurs_zapada_vedet_k_yadernoy_voynе> (검색일: 2024.2.2.).

94) 위의 글.

도쿄는 미국의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신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 또한 국제 비확산 체제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북한의 전승절에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급 관료가 평양을 방문한 사실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긴장 고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러시아-중국-북한 연합이 부활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빈은 1961년 소련과 북한 간에 체결됐던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에 명시된 것처럼 모스크바가 평양에 대해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북한은 이미 주권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기술적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⁹⁵⁾

앞에서도 인용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 이고르 코로첸코 역시 러북 정상 회담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소빈과 유사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국가들의 반중 및 반러시아 군사 블록 형성 시도(오쿠스 등)가 활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군사 및 정치 구도 속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의 고위급 군사 및 전략 협의를 개최해 상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러시아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중에도 중러북 연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학 센터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Konstantin Asmolv) 연구원은 러시아 국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함께 뭉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스크바, 평양, 베이징은 서방 집단이라

95) Виталий Совин, “Россия - Северная Корея - Китай: вос создан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треугольника.” Валдай, 2023.8.24., <<https://ru.valdaiclub.com/a/highlights/rossiya-severnaya-koreya-kitay/>> (검색일: 2023.11.17.).

는 공통의 위협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격변 속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스몰로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화가 이미 형성되고 있고, 이는 러시아에 장기적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⁹⁶⁾

러시아가 중북과 함께 핵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과격한 제안도 있다. 러시아의 군사·정치 문제 전문가이며 플레하노프러시아경제대학 부교수인 알렉산드르 페렌지예프(Alexander Perendzhiev)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국제 핵 안보 체제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 북한과 핵 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지구 곳곳에 더 많은 무기를 배치하려 한다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페렌지예프 교수에 따르면 그 방법만이 미국의 폭주를 막는 유일한 해법이다. 그는 중러북 핵 동맹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여기에 인도,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미 성향 국가들 사이에 핵 동맹을 확대하자는 위험천만한 제안이다.⁹⁷⁾

나. 동북아 신냉전 전망

그러나 현시점에서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러북 연대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는 없다. 또 중러북 3국 사이에도 명확한 연대감 표명이

96) “Эксперт заявил, что Россия, Китай и КНДР будут вынуждены держаться вместе,” *Москва* 24, 2023.9.14., <https://www.m24.ru/news/politika/14092023/619108?utm_source=CopyBuf> (검색일: 2023.11.22.).

97) “Политолог призвал к созданию ядерного союза России, Китая и КНДР,” *Ветеранские вести*, 2023.12.4., <<http://vvesti.com/politika/politolog-prizval-k-sozdaniyu-adernogo-souza-rossii-kitaa-i-kndr>> (검색일: 2023.12.8.).

나 행동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조성되는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러시아가 스스로 중국이나 북한을 끌어들이며 동맹이나 여타 제도화된 연대 기제를 만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⁹⁸⁾ 하지만 향후 미중 관계와 미러 관계 그리고 동북아 안보 환경의 추이에 따라, 특히 중국의 선택에 따라 중러 관계가 동맹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동맹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20년 10월 23일 푸틴 대통령은 중러의 군사 동맹 체결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 지금까지 러시아가 중국과 군사 동맹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적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⁹⁹⁾ 그런데 2021년 3월 1일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똑같은 질문에 답하면서 중러 양국 관계가 다른 나라들 사이에 체결된 군사 동맹과는 완전히 다르며, 두 나라는 비동맹 원칙 그리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비대결의 원칙을 견지한다고 강조했다.¹⁰⁰⁾ 이들 발언이 시사해 주는 바는, 중러 양국 사이에 동맹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며, 러시아는 중국과의 군사 동맹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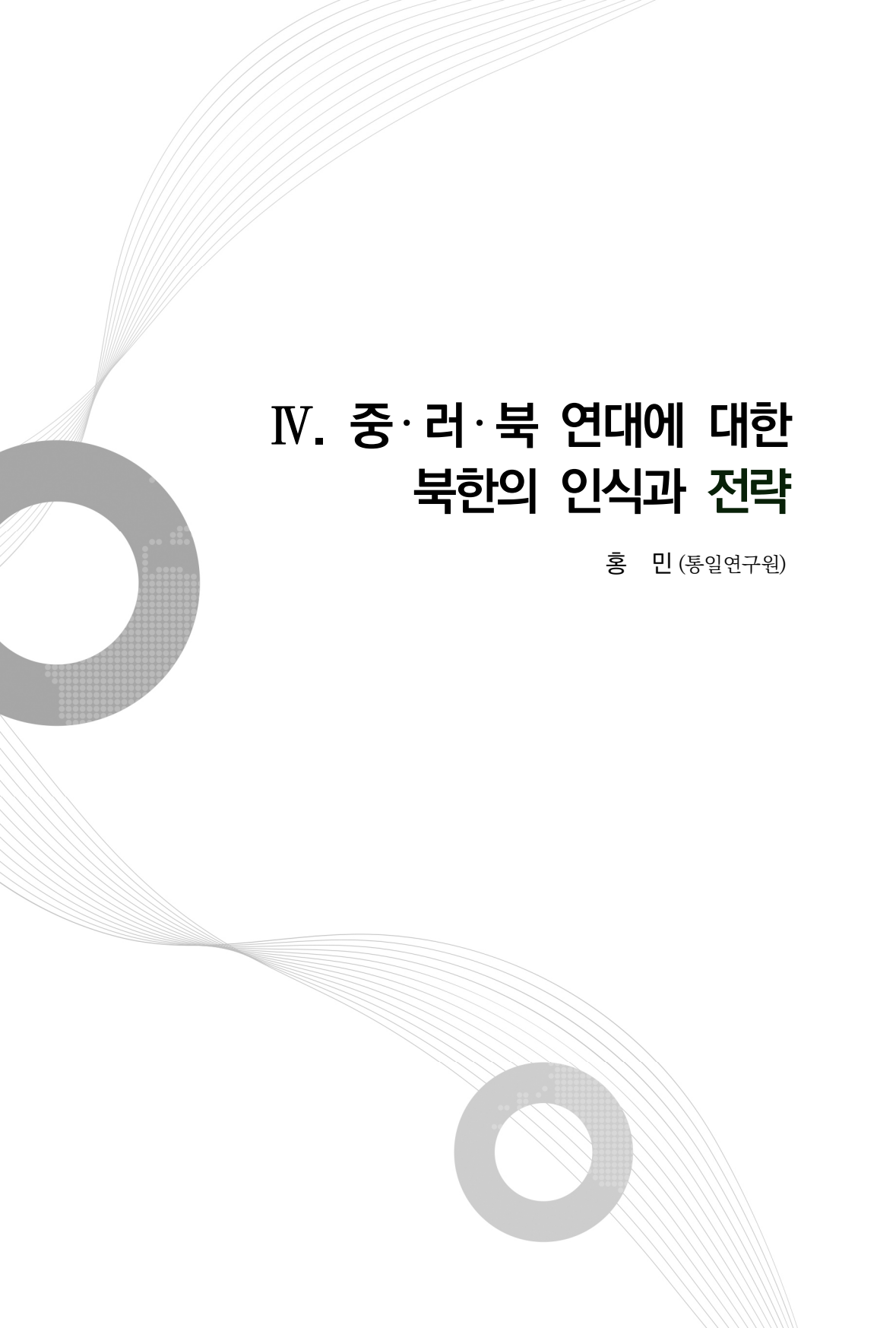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할 때, 가까운 시일 안에 러시아가 중국 더 나아가 북한까지 끌어들이며 제도화된 동맹체를 결성할 것으로는 예상

98) 2023년 11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장위샤(張玉曉)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상호 작용의 모델이라면서, 러시아는 “일부 공격적인 서방 국가들과 달리 군사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Шойгу заявил, что Россия и Китай не создают военный блок,” ТАСС, 2023.11.8. <<https://tass.ru/armiya-i-opk/19228707>> (검색일: 2023.12.8.).

99) “푸틴, 중러 군사동맹에 “지금은 필요없지만 배제않을 것,” 『연합뉴스』, 2020.1.0.23.,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3023500009>> (검색일: 2023.12.8.).

100) “중국 국방부장 “美에 대항 위해 러와 군사동맹 체결 계획 없다,” 『연합뉴스』, 2021.3.3.,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3061400009>> (검색일: 2023.12.8.).

되지 않는다. 하지만 러시아가 지향하는 다극화된 세계질서 실현과 동북아 역내 러시아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중국과 북한과 함께 반미, 반제, 주권을 공동분모로 하는 연대감 조성에 주력할 것임은 확실하다. 특히 러시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대한 대응으로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을 보도한 이후, 러시아 언론은 이를 일제히 인용 보도했고, 러시아 정부의 반응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이 중러북 연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대응 조치를 구체화할수록, 중러북은 이를 구실로 삼아 삼각 연대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다. 대화와 외교가 실종된 한반도에서 안보의 딜레마가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IV. 중·러·북 연대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전략

홍 민 (통일연구원)

1. 북한의 대중국 관계에 대한 입장

가. 미·중 전략경쟁과 현 정세에 대한 북한의 시각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과 러시아의 대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등은 국제질서의 전략적 지형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힘으로 패권을 유지 또는 변경하려는 경쟁 구도 속 힘의 분산과 다극화 양상이다. 이런 양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라는 ‘판’ 위에서 상대를 압도하려는 미중 전략경쟁의 불가피성, 서방의 민주주의와 중러의 권위주의라는 진영 논리로 설명되지만 크게는 미국 중심 질서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 지역 패권을 둘러싼 다극화로 볼 수 있다.

이런 구도는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구조적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또는 ‘제국주의 대 반제국주의’와 같은 진영 논리가 강화될 경우, 국가 및 진영 간 대치, 상호 대결과 혐오의 프레임이 지배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및 국제 협력의 가능성은 위축되고 한반도 평화 해법은 더욱 복잡한 함수관계와 미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이런 상황을 더욱 가속화하는 하나의 중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 및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반도 문제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열강의 지정학적 힘겨루기 판 위에 놓여 있다. 문제 자체가 열강들의 이해와 연계된 역사적이고 구조적이며 중층적인 사안들의 복합적 구성물이다. 남북한의 구조화된 장기분단체제,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및 군비경쟁, 북한의 핵 고도화, 미북 적대관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미일과 중러북의 진영전선이 강화되고 동북아 군비경쟁이 과열될수록 한반도 대치 전선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다. 미중 전략경쟁을 큰 구도로 한 대결과 갈등 논리에 연루될수록 한반도 평화의 구조적·현실적 한계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¹⁰¹⁾

그렇다면 북한은 현 정세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선 북핵 문제 접근 환경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선 다극화된 국제체제로의 변화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2010년 중국의 일본경제 추월, 2012년 중국의 군사굴기 선언,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중국의 부상과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국면 속에서 중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일련의 흐름이 형성됐다. 이후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전쟁과 압박 강화, 2018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NATO 동진에 대응한 대미 강경정책 강화, 2021년 바이든 정부의 동맹 규합을 통한 대중국, 대러시아 압박 강화 등이 결합하면서 다극화, 진영화 양상이 전면화됐다.¹⁰²⁾

이 과정에서 국제 핵질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 주도의 핵질서와 비확산 규범이 느슨해지고 다극화, 강대국 진영 게임이 본격화되면서 국제 핵규범이 형해화돼 가고 있다. 2018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저위력 핵탄두 대규모 배치 계획을 담은 핵정책 선언, 미러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의 붕괴, 중국의 핵무기 고도화를 견제할 군비통제 레짐의 부재,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이완 등이 나타나면서 강대국 간 핵무기 현대화 및 군비경쟁, 핵기술 이전의 우려가 증대되었다. 다극화와 강대국 진영 게임 속에서 국제 핵질서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핵에 대한 국제공조체제의 균열이다.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 동안 북핵 문제 접근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불량국가’ 프레임 속에서 이뤄져 왔다. 대북제재와 외교적 차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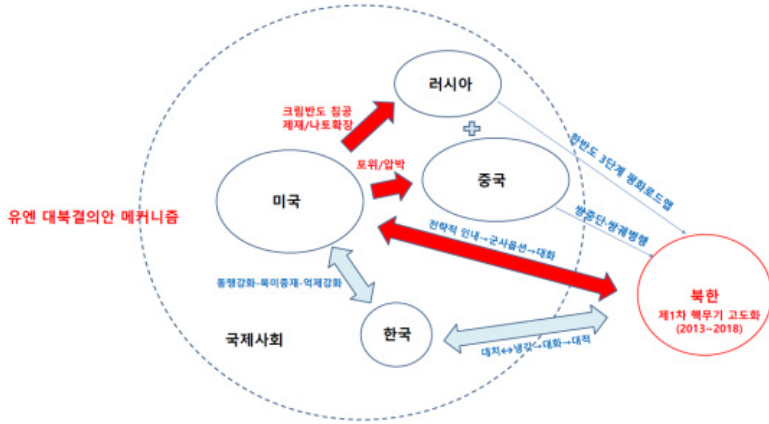
101) 한동호 외,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 29.

102) 홍민, “국제질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북한의 국가전략,”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2023.5.18.),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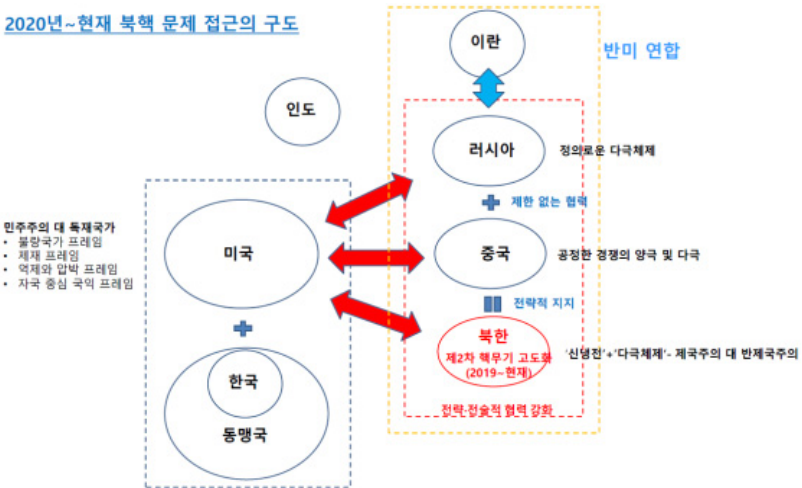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메커니즘을 통한 압박이 북핵 국제공조체제의 중심축을 이뤘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쌍중단·쌍궤병행, 한반도 3단계 평화로드맵)을 주장했지만, 2020년까지는 ‘북한의 비핵화’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지지였다. 사실상 ‘유엔 대북결의안체제 대 북한’이란 구도였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의 첨예화, 자국 중심의 국익 프레임 확산, 강대국 간 진영화 구도가 확연해지면서 북핵 문제 접근의 구도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정의로운 다극체계’, 중국은 ‘공정한 경쟁의 양극 및 다극’을 주장하면서 이들은 상호 ‘제한 없는 협력’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북한은 한 발 더 나아가 현 국제정세를 ‘제국주의 대 반제국주의’, ‘신냉전’, ‘다극체제’로 규정하며 중국·러시아와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이란까지 가세하면서 소위 ‘반미연합’의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연속선상에서 2020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체제에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문제라는 설정에서 벗어나 강대국 경쟁과 진영화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구도로 변화된 것이다.

<그림 IV-1> 2014~2020년 북핵 문제 접근의 구도



2020년~현재 북핵 문제 접근의 구도



출처: 홍민, “국제질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북한의 국가전략,”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2023.5.18.), pp. 4~5.

북한은 그 어느 국가보다 이런 변화된 판세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제1차 핵무기고도화(2012~2018)를 추진하며 대미 협상구도 형성에 주력했다면, 제2차 핵무기고도화(2019~현

재)를 통해 되돌이키기 어려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전략무기 5개년 계획 선언, 2022년 핵실험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 급기야 2023년에는 대남·대미 대적행동 차원에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역내 전략자산 추가 배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응하면서 북한은 물론 사실상 중국까지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런 압박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지지하고 러시아는 러북 사이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구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제 북핵 문제는 미중의 패권 경쟁, 미래의 첨예한 대립의 구도 안에서 강대국 간 경쟁의 소재로 변질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설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에 대한 추론과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북한의 장기적 목표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핵무기 고도화를 수단으로 미북협상을 통해 일정한 핵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북관계 개선과 정상적인 교역과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북한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미국은 필수적인 통과지점이다. 다른 하나는 핵무기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미북협상이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핵무기 고도화와 대북제재 아래서 제한적인 경제 운용과 국방력 발전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핵무기 고도화는 중요한 수단이다.

나. 주요 미·중 현안 및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활용

우선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국 견제의 큰 그림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서는 대외선전매체를 제외하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인태전략을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행태, 편가르기식 외교, 대중국 압박정책의 일환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인태전략에 대한 비중있는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중국이 쿼드를 ‘소(小) NATO’로, 인태전략을 중국에 대한 포위망으로 인식하는 것과 결을 같이하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은 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미 장기전을 선언하며 2020년 5월부터 『노동신문』 6면의 대남파트를 담당하는 조국통일부를 폐지하고 국제면으로 통폐합하는 지면 개편을 단행했다. 남한 및 남북관계 관련 기사가 사라졌다. 최근에 한국 사회의 반정부 시위를 부각하는 기사를 다시 게재하고 있지만, 국제면 기사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은 극히 적거나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달라진 것은 2023년 초부터 대외적인 북한의 입장 표명이 매우 빈번해진 점이다. 크게 국제기구, 미국, 국제 및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입장 표명 및 논평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외무성, 국방성, 조선중앙통신 등의 담화, 기자 질의응답, 논평 형식을 취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연설을 통해 지역 및 국제현안에 대한 대외정책 입장을 갖고 한반도 정세에 유리하도록 주동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¹⁰³⁾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가시화된 대중국 견제 강화, 미러 대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이 미중 경쟁의 심화, 신냉전적 진영화, 미국의 외교적 곤경을 가져온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것을 대미 전략 차원에서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결국 북한은 미국의 인태전략, 한미일 안보협력을 대중국 포위·압박 및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한편 ‘신냉전’ 구도로 설명하려 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태도다. 러시

10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3일 회의 진행,” 『노동신문』, 2021.6.18.

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북한은 양면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북한의 입장을 환기시키고 공세적으로 메시지화하려는 차원이다. 러시아가 느꼈던 안보 우려와 위협, 미국과 NATO의 일방주의적인 정책, 제재를 통한 압박이 갖는 부당성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환기시키고 공세적으로 메시지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주변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의 냉엄함에 대한 인식이다. 그런 측면에서 핵무기에 대한 집착에 보다 확신을 실었을 가능성이 있다. 핵 개발 포기 이후 제거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 핵무기 포기 이후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등의 사례는 북한에게 핵무기 고도화의 완수가 대미용뿐만 아니라 대중국, 대러시아에 대한 자주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수단이란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에 필요한 명분 및 시간 확보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미중 및 미러의 대립 구도, 동북아의 진영화 구도에 따른 군사적·외교적 긴장 고조는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의 명분을 제공하는 한편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개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 호재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은 주요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과 서방에 대항하는 반미 및 반제재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 대북제재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핵무기 고도화에 필요한 명분과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동북아 군비경쟁과 북한의 전략

2000년대 들어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 미국의 견제와 봉쇄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현실화돼 왔다. 2014년은 미중 전략 경쟁 구도가 동북아 '신냉전' 구도로 전선을 확장하는 결정적

해였다고 볼 수 있다.¹⁰⁴⁾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지역 분쟁이 그 도화선이었다.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가 대러시아 제재를 단행하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 이해를 강화한다. 중국은 지역 패권을 넘어 미국과의 경쟁을 위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러시아를 활용하고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맞서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 강대국 지위를 확고히 하는 데 중국을 활용하는 ‘전략적 이해’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러시아는 중국에게 S-400 지대공 미사일 체계와 Su-35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한다. 당시 첨단무기인 두 무기체계를 전격적으로 중국에 판매한 배경에는 경제제재와 국제 고립으로부터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이해, 미국의 아시아 미사일 방어망(Missile Defense: MD) 구축과 동북아 전력 태세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이해가 놓여 있다. 이 무기거래는 중러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하는 행보였다. 러시아가 개발한 ‘S-400(Triumph: 트리움프, NATO 제식명 SA-X-21)’은 당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술 수준에 있어 세계 최고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평가받았다. 스웨덴의 한 유력 일간지는 ‘세계를 떨게 하는 러시아 10대 무기’ 중 하나로 S-400을 선정하며 국제 전력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무기체계로 꼽은 바 있다.¹⁰⁵⁾

S-400 지대공 미사일은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저고도 순항미사일, 공군기(전투기, 전폭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러시아는 선전해 왔다. 최대 사거리 400km, 요격고도 30~185km, 비행 속도 마하 14로 현존하는 요격체계 중 제원이 월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출력이 큰 광폭의 레이더를 통해 최대 300개 표적의

104) 홍민, “신냉전 기회삼아, 안전보장 모색하는 북한,” 『통일시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vol. 156, 2019.10.1.), p. 25.

105) “‘세계 떨게 하는’ 러 10대 무기... ‘국제전력 균형에 영향,’” 『연합뉴스』, 2017. 3.5., <<http://www.yna.co.kr/view/AKR20170305055400080>> (검색일: 2023.12.26.).

포착, 100개 표적의 동시 추적, 24개 표적에 대한 동시 공격 성능을 갖추고 있다. 제원만 놓고 본다면, 미군 PAC-3에 비교해서도 능력이 한 단계 앞설 뿐 아니라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보다 최대 사거리 및 요격 고도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능력으로 스텔스 탐지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미군의 주력 폭격기인 B-2, F-117을 비롯하여 최신예 전투기 F-35 등 미국 공군의 핵심 전력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받는다. 일종의 무기체계에 있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더 위협적인 것은 미국 해군 전력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시속 885km)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대체할 보다 빠른 초음속의 순항미사일 개발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탁월한 방공 능력 때문에 중국은 S-400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하기 위해 2014년 이전부터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러시아는 S-400이 갖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전략적 가치, 첨단기술의 유출을 우려하여 중국 판매뿐 아니라 해외 판매 자체를 차단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크게 변화하면서 이런 구도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무력 합병으로 인해 미국 및 유럽이 중심이 된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 중국이 이런 상황을 활용하여 러시아 천연가스의 대규모 수입을 조건으로 S-400 구입을 제안한다. 2014년 5월 시진핑-푸틴 정상회담을 통해 S-400의 대중국 판매 논의가 급진전 된다.¹⁰⁶⁾ 결국 S-400 대공 미사일 요격체계는 2017년부터 중국으로 인도가 시작되고 2019년 완료하게 된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2016년부터

106) 2014년 5월 개최된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협력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S-400 운영을 위한 합동 미사일방어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S-400 도입과 배치는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안보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곧바로 대응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S-400의 대중국 판매를 합의 한 직후 한국 내 사드 배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2014년 6월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는 사드 배치에 신중했던 기존 태도를 바꿔 배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당시 미국이 S-400의 중국 도입을 심각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미 국방부가 2016년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⁰⁷⁾ 이 보고서는 중국의 S-400 대공 미사일 요격체계가 중거리 탄도미사일(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MRBM)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대공 및 방공 능력이 한반도, 대만해협,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미군, 일본, 대만의 공군기나 함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⁸⁾

이런 상황과 연동하여 중국의 핵전략에도 모종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중국은 그동안 핵무기 사용에 있어 소극적으로 유지했던 핵정책과 달리 실제 핵전력 증강에서는 공세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2016년 1월 중국은 전격적으로 로켓군과 전략지원군을 창설하게 되는데, 로켓군은 러시아의 전략로켓군과 유사하게 전략 핵무기 운용을 전담하는 별도의 군종으로 창설된다. 시진핑의 군사굴기를 보여주는 과감한 확장이다.¹⁰⁹⁾

107)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2016.4.26., <<https://dod.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2016%20China%20Military%20Power%20Report.pdf>> (검색일: 2024.1.26.).

108) 홍민, "신냉전 기회삼아, 안전보장 모색하는 북한," p. 26.

109) 위의 글, p. 26.

중국의 이러한 공격적 핵능력 확장의 저변에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이 일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2년 첫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이후 2014년부터는 남중국해에서 합동해상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기존 남중국해에 대한 신중한 외교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중국과 이 지역에 대한 공동 이익 차원의 협력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더 나아가 2017년 중러 해군은 발틱해에서도 합동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수년간 러시아가 NATO와 갈등을 빚어 온 지역이다. 한편 이와 동시에 중국에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접근 기회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유라시아를 비롯하여 유럽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러시아와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에서 첨예화되고 있는 군비경쟁과 진영화 양상은 북한에게 전략적 기회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국력의 현격한 열세와 오랜 기간 지속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로 동북아 갈등 구도를 활용하는 측면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8년부터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미 메시지 차원에서 제기하는 ‘안전보장’은 이러한 중러의 전략적 협력, 동북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군비경쟁 구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가 ‘안전보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의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이해를 대변하는 외교적 수사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제기하는 안전보장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의미하는데, 북한의 자주권과 제도를 위협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위협 철회가 핵심이다. 핵심은 미국의 확장억제력 약화라고 볼 수 있다.¹¹⁰⁾ 이런 ‘안전보장’ 주장은 중국의 이해와도 맞닿아 있다. 북한을

110) 홍민 외,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 26.

명분으로 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 증강은 중국을 포위·압박하는 이중 용도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한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중국의 대미 견제 차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이 제기하는 ‘안전보장’은 동북아 군비경쟁 구도를 배경으로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과 연계돼 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아시아에서의 ‘합동작전수행’ 개념 구체화, 군사태세 강화, 중국을 포위·압박하기 위한 전력 증강, 한국·일본·대만 등의 무기도입 및 전력증강을 맹렬하게 비난해 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제휴, 미중 및 미러를 비롯한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군비경쟁 구도를 염두에 두고 소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그림판을 환기시키는 내용들이다. 한마디로 이런 군비경쟁 구도에서 북한의 안전보장이 위협받는 현실, 자신의 안전보장 요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지정학의 활용 의도다. 이런 군비경쟁 구도를 명분으로 한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는 미국은 물론 중국에게도 자신들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정당화하는 일종의 외교적 수사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¹¹¹⁾

2. 북한의 대러시아 관계에 대한 인식과 대응

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라는 기회 공간

북한은 중동에서의 분쟁이 러시아에게 기회이며 러시아가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과 중동의 불안정성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장기화로 고립화된 러시아에게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

111) 위의 책, p. 26.

나 침공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 내부의 불협화음을 봉합하고 대서양 국가들의 단결을 가져왔다.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NATO와의 대립각과 반미 주장이 큰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들 서방세계 내부의 분열을 가져왔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자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한 반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유럽연합이 취해야 할 입장을 놓고 격렬한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들 사이의 입장 차 뿐만 아니라 각 국가 내부에서의 사회적 분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적인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차츰 밀려나는 모양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모두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미국이 언제까지 두 분쟁에 안정적인 개입과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러시아는 서방세계와 미국 내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타협 지점이 모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의 친이스라엘 입장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보기에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도덕적 이유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죽일 때는 미국은 비판적이었지만,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같은 일을 할 때는 미국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외교의 곤경을 드러내 보인다.

중동에서의 분쟁은 서방세계의 결속과 강경한 대러시아 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는 운신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북아에서 미중 전략경쟁 이외에 미리 대치 구도를 조형하는 하나의 기회이다. 유럽 전선과 동북아 전선 모두에서 러시아의 대미 견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북한의 전략적 활용 가치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은 미

국의 도덕적 위상이 흔들리고 서방의 결속에서 균열을 만들고 반미 전선의 확장으로 읽혀 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에 대항했던 러시아의 모험주의가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 줄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유럽과 중동에서의 정세를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현상 변경될 수 있다는 기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대미 견제의 공조를 할 수 있다는 기대, 핵·미사일 고도화의 명분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나. 러·북의 장기적인 전략적 일치에 대한 북한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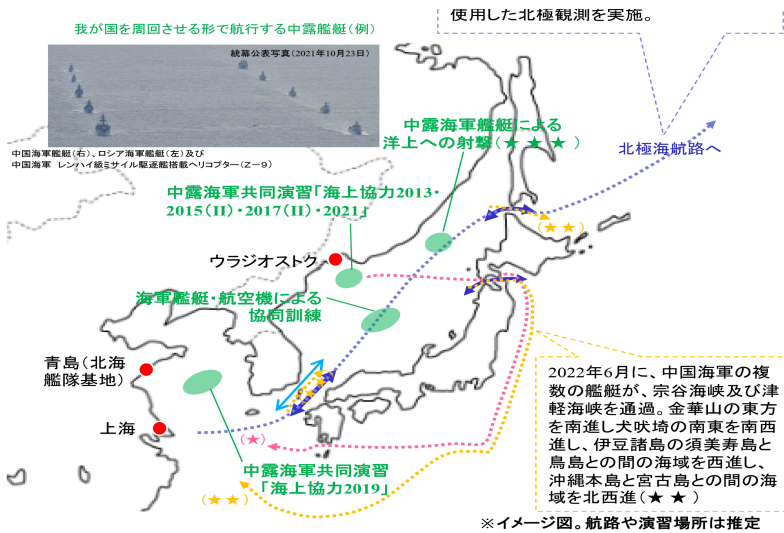
2000년 이후 푸틴이 표방한 전략은 ‘강대국’ 대열의 복귀다. ‘강대국’이란 글로벌 안보와 관련한 주요 결정이 모스크바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목표는 러시아식으로 달성되었다. 조지아(2008), 크림반도(2014), 시리아(2015), 리비아(2016), 우크라이나(2022) 등에 군사개입 및 침공을 감행, 적극적 자국 이익 추구라는 호전적 플레이어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부각시켰다.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만큼 지정학적 욕구의 스펙트럼이 넓다. 러시아는 북극과 태평양 연안, 발트해와 흑해 등을 따라 유럽과 아시아, 서쪽과 동쪽에서 확고한 안보적 진지, 교두보, 진출로 구축과 함께 경제적 네트워크와 외교적 균형이라는 복잡한 지정학적 욕구를 표출해 왔다. 러시아가 인식하는 지정학적 긴장은 NATO의 동진에 대한 대응,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시아 주도 경제통합과 중국의 확장주의 사이의 긴장, 동북아에서 미국 전력 증강을 견제하고 태평양 진출로의 안정적 유지, 북극과 태평양 연안을 따라 유럽과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로 확보 등 다양하다.

최근 러북관계에서 나타나는 밀착은 ‘수망상조 동주공체(守望相助 同舟共濟)’라고 할 수 있다. 손자병법 구지편(九地篇)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듯, 모두 힘을 합하여 서로 도와

주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뜻이다. 사실 중리의 전략적 협력도 비중의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절박성의 측면에서 보면 러북은 당장의 단기적 이해에서 더 절박하다고 할 수 있다. 모스크바의 한반도정책은 표면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역내 국가가 지지하는 워싱턴과 평양 간의 군비통제 및 신뢰구축협정을 통해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다는 것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피력해 왔다.¹¹²⁾ 그러나 지금 러시아는 유럽과 동북아를 연계하는 대미 견제 카드로 북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여할 무기와 전시물자의 공급기지로서의 이해가 크지만, 미중 경쟁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욕망이 지속되는 한, 러북의 밀착은 중장기적인 전략적 일치로 갈 가능성이 높아 졌다.

<그림Ⅳ-2> 중리 군사훈련 현황



출처: 日本 防衛省, “中国情勢(東シナ海太平洋日本海),” 令和 5年 2月, p. 1, <https://www.mod.go.jp/j/surround/pdf/ch_d-act_a_202308.pdf> (검색일: 2023.12.26.).

112) 러시아의 북핵 문제 및 한반도 평화 관련 입장과 관련해선 홍민·조한범·박인휘,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 59~61 참조.

중러는 2012년 11월 첫 합동군사훈련 실시 이래로 지난 10년 동안 양자 및 다자 훈련을 합쳐 최소 45회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중 양자 간 단독 훈련은 20회였고 나머지는 다자 간 훈련에 함께 주도적으로 참가했다. 일본 방위성이 2023년 5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러는 해군과 공군전력을 동원해 한반도 서해, 제주도 서남방, 독도 인근, 블라디보스토크, 오후츠크해 등에서 정기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 왔다.¹¹³⁾ 훈련 장소 및 동선으로 보면,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는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둘러싸고 남쪽으론 중국의 태평양 진출로 확보, 대한해협 및 동해상으로 한미일 훈련 견제, 북쪽으로 러시아의 북극해 항로 확보 및 서태평양 진출로 확보 등이 목적이다. 선으로 연결하면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과 대부분 일치한다.¹¹⁴⁾ 중러 모두 미국의 동북아 전력 투사를 억제하고 태평양으로의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서 공통의 이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러북은 동해상의 미국의 전력 투사, 한미일 안보협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공통의 이해를 가질 수 있다. 향후 러북 사이에 군사협력 차원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면, 러북 연합훈련은 미국에 대한 차단·억제의 실질적 목적도 있지만, 한미(일) 연합훈련 기간에 대응하는 시위적 효과를 염두에 둘 수 있다. 2023년 9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연합훈련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¹¹⁵⁾

그러나 중러북 3자의 연합훈련 가능성은 당장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한 동기관 점에서 중국이 북한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13) 日本 防衛省, “中国情勢(東シナ海太平洋日本海),” p. 1.

114) 제1도련선은 1982년 중국의 해군사령관 류화칭(刘华清)이 해상에 설정한 가상의 방어선이다.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에 해당한다. 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를 사슬처럼 연결하여 배타적인 재해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115) “러 국방 “북한과 연합훈련 개최 논의...이웃인데 왜 안되겠나,” 『연합뉴스』, 2023.9.5.,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4162751080?input=1195m>> (검색일: 2023.12.26.).

따라서 향후 러북은 양자 연합훈련 또는 중러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별도로 일정한 작전적 연계성을 갖는 훈련을 동시간대 할 가능성이 있다.¹¹⁶⁾ 이와 같이 다소 제한적이지만 러북 사이의 협력은 장기적인 전략적 일치로 갈 가능성이 있다. 2023년 9월 러북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주개발 협력 가능성을 피력했는데,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우주개발 협력은 중장기적인 전략적 일치를 염두에 둔 행보 중 하나일 수 있다.

다. 북한이 기대하는 단기적 이해 차원의 러·북 군사협력

2023년 11월 20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김정은 당 총비서 접견 및 최선희 외무상과의 회담이 있었다. 북한은 “미래지향적 백년대계 구축”, “공동의 행동 강화”에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9월 러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 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구체적 교류 협력 계획을 확정하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¹¹⁷⁾ 러북의 전략적 제휴는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이뤄지는 구도다. 첫째, 무기 및 기술 지원의 군사협력, 둘째,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소위 ‘인민복지’로 포장된 경제협력, 셋째, 외교에서의 상호 지지와 반미연합의 외교협력이다. 미국에 대한 견제라는 공통의 이해를 기초로 상호 ‘군사’와 경제를 실리적으로 교환하는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교환 구도의 일환으로 러북 사이의 무기거래와 군사기술 협력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무기거래를 부인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군사협력을 양측 모두 최근

116) 홍민, “북러의 군사협력과 외교적 밀착의 전략적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35, 2023.10.23.), p. 8,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19440&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4.1.19.).

117) 위의 글, p. 1.

까지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열병식(2023.7.27.), 김정은의 방러(2023.9.12.~17.)를 통해 군사협력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과시한 바 있다. 이런 공식적 표명 이외에 2023년 중반부터 양측이 무기거래를 한 구체적 사항이 포착됨에 따라 러북의 군사협력은 한반도는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 유럽전선과 동북아전선을 연계하는 ‘대미 견제’ 차원의 협력¹¹⁸⁾

러북의 협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향후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단기적 필요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중장기 전략적 일치 차원이다. 단기적 필요 차원은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전환점을 염두에 두고 러북 상호 정세를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협력하는 경우다. 중장기 전략적 일치 차원은 장기간의 지정학적 협력의 필요성 차원에서 협력의 지속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러북의 군사협력의 수준과 지속성은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느냐와 연관돼 있다. 또 향후 행보에 따라 단기적 필요성에서 장기적 전략 일치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거나 이미 중장기 전략 일치의 목표 아래 협력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협력 구도는 일차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세 관리, 유럽과 동북아에서의 대미 견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한 전술적 필요의 부분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3년 5월 이후 사실상 ‘장기적 소모전’ 양상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¹¹⁹⁾ 양측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

118) 이 부분 기술은 본 과제의 문제의식을 담은 통일연구원 현안분석 발간물, 홍민, “북러의 군사협력과 외교적 밀착의 전략적 함의”에 기초하여 작성함.

119) CRS, Russia’s War in Ukraine: Military and Intelligence Aspects, 2023. 9.14.

의 대부분이 포격전에 집중되고 있고, 1년 이상의 전쟁을 통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양측 모두 장비의 손실 및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 모두 새로운 작전을 전개하여 현상을 변경시키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장비 수리 및 교체, 최전선 병력 순환, 포탄 및 탄약 조달 등에 급급한 국면에 있다. 에이브릴 헤인즈(Avril Haines)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5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러시아가 강제 동원을 시작하고 기존 공급을 넘어서는 양의 제3의 탄약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규모 공격 작전조차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¹²⁰⁾ 북한은 제재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탄약, 포탄, 미사일 등 전투 물자를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러북 모두 미국 대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기적 이해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전세의 불확실성은 미국 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시 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과 공화당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팽배하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¹²¹⁾ 여기에 중동에서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미국의 외교를 비롯한 국내 여론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에서 반미 전선이 형성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은 ‘우크라이나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다. 러북의 군사적

120) Adam Taylor, “How Russia Learned From Mistakes to Slow Ukraine’s Counteroffensive,” *Washington Post*, 2023.9.8.,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3/09/08/russia-ukraine-defense-counteroffensive/>> (검색일: 2023.12.26.), 재인용: 홍민, “북러의 군사협력과 외교적 밀착의 전략적 함의,” p. 2.

121) 지난 10월 3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의회에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240억 달러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협력이 전세에 영향을 미치고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서방의 피로도를 높일 경우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러북 사이의 군사 협력은 바이든 행정부를 외교적 곤경에 빠지게 하여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셋째, 북한과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민감해 하는 한반도 및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미 견제 차원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유럽과, 북한이 미국과 대치 중인 동북아는 지정학적 이해에 있어 상호 연결돼 있다. 러북의 군사협력은 이 두 지역 사이의 역동성을 활용하는 의미가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 미국의 서태평양 및 한반도 인근으로의 전력증강, 군사태세 강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한다.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캄차카반도 사이의 오호츠크해를 통한 서태평양 진출 통로의 안정적 관리, 베링해와 북극해 항로 관리, 한반도 동해에서의 미일 차단이 중요한 과제다. 사실상 동북아 및 서태평양에서의 미국 견제가 핵심이다. 최근 러시아는 태평양함대의 전력증강, 단독·양자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미국 견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¹²²⁾ 러북 간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정세”에 대해 “공동행동 강화”를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¹²³⁾ 러북의 밀착 과시는 군사 협력 및 핵·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을 전면에 부상시킴으로써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한편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경고의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유럽 전선과 동북아 전선 양쪽을 연계하는 대미 견제 차원에서 러시아는 러북의 군사협력을 활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¹²⁴⁾

122) “한미일이 연합훈련한 날... “러 태평양함대 동해서 대규모 훈련”, 『연합뉴스』, 2023.4.17.,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7114700009?section=search>> (검색일: 2023.12.26.).

1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로씨야연방 외무상 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3.10.20.

그렇다면 북한에게는 러북 군사협력은 어떤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일까. 첫째, 러북 군사협력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전선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중러북 사이를 연결하는 양자적 연대와 외교적 지지를 통해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핵보유를 인정받는 '진영 내 승인효과'를 거두는 차원이다. 셋째, 대미 군사적 억제력의 신뢰성을 과시하는 차원이다. 재래식이든 핵무기이든 양측 사이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무기에 대한 기술적 신뢰성, 대미 억제력을 과시하는 차원이다. 넷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대중국 의존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협력의 다변화,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자극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의 구체적인 단기적 목표 역시 미국 대선 영향과 차기 미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미국 대선 전후까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되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의 진전을 이뤘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차원의 메시지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보다 빨리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도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보여주는 차원이다. 이런 행동의 저변에는 핵무기 보유와 핵 능력이 되돌이키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불가역성'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러·북의 군사협력 가능성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수준은 미국 대선까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여도, 실질적인 전세의 변화, 미국의 대유럽-대중동-대동북아 정책 양상, 미국 내 선거 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러북의 군사협력은 생각보다 빠르고 폭넓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군사협력이 가시적으로 인지되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진전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

124) 홍민, “북러의 군사협력과 외교적 밀착의 전략적 함의,” p. 3.

기 어렵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는 2023년 10월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천 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9월 7~8일 나진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인 모습, 같은 달 12일 러시아 선박 앙가라호가 두나이항에 정박한 모습, 10월 1일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가 러시아 티호레츠크의 탄약고에 도착한 모습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RUSI), 미국 NK뉴스 등도 러북의 무기거래 정황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김정은의 방러 기간(2023.9.12.~17.) 이전부터 이미 무기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¹²⁵⁾

더 나아가 북한이 보도한 김정은 관련 동향 내용을 보면,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은 이미 1년여 전부터 진행돼왔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2022년 중반부터 ‘전쟁준비’를 갑작스럽게 강조하기 시작한 바 있다. 특히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2022.6.8.~10.)에서 전쟁준비를 강조하며 무기 생산을 위한 현대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11월 9일에는 현재 러시아에 주로 지원되고 있는 무기 품목 중 하나인 방사포탄 생산공장에 대한 ‘비공개 현지지도’를 진행한 바 있다. 이 현지지도를 통해 김정은은 “대구경방사포탄 계열생산을 위한 능력조성”을 강조했다는데, 이것은 무기 대량생산을 의미한다. 이런 일련의 드러난 몇 가지 사실만 봐도 우리에게 인지된 2023년 9월 러북 정상회담 이전부터 대러시아 지원을 위한 무기 생산을 진행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¹²⁶⁾

125) 위의 글, pp. 4~5.

126)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8월 16일 북한과 러시아 무기를 중재한 혐의로 러시아 소재 3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부터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20종이 넘는 무기와 탄약이 거래된 것으로 발표했다. “美, 北·러 무기거래 관련 3개 기관

2023년 7월 26~2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무장장비 전시회 및 열병식 참석 직후, 북한은 김정은의 방러 한 달 전 두 차례 군수공장 현지지도(8월 5일, 13일)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이때 미사일, 장갑차, 조정방사포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는 것이 절실한 문제”라고 김정은의 지시를 전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이 포착한 2023년 8월 말 무기의 컨테이너 이동 정황은 김정은 방러 전 초도물량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¹²⁷⁾

2022년 증반부터 최근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한 전쟁준비와 무기 생산의 현대화에 역점을 두어 왔는데, 이런 움직임은 실제 내부적인 전쟁준비 차원도 있지만, 러시아 지원을 위한 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두 차례 군수공장 현지지도를 통해 언급한 무기 공장은 ‘대구경방사포탄’, 최신 소총과 저격무기, 포탄 및 폭약 제조 약전공장, 전술미사일 및 발사차량 생산공장, 유도기능을 가진 122mm, 240mm 방사포탄 생산공장, 전투장갑차 생산공장 등이었다.¹²⁸⁾ 대부분의 무기 품목들이 현재 포격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정황상 드러난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 품목 이외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군사협력 분야에는 어떤 것이 가능할까. 북한이 2012년 이후 추진해 왔던 핵·미사일 고도화, 2021년 공개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에서 집중하고 있는 무기, 방러 전 김정은의 강

제재... “네트워크 발본색원,” 『연합뉴스』 2023.8.17.,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7002400071?section=north-korea/all>> (검색일: 2023.12.26.).

127) 홍민, “북러의 군사협력과 외교적 밀착의 전략적 함의,” p. 5.

128) 홍민, “북한 김정은 중요 군수공장 현지지도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22, 2023.8.17.), p. 5,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14374&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3.12.26.).

조 사항, 러시아 방문 당시 장소 등을 통해 추론을 해보면, 러시아의 대북한 군사협력 가능 분야는 크게 무기와 훈련분야로 볼 수 있다. 우선 무기분야에서는 ① 군사 정찰위성을 필두로 한 우주개발, ② 공군 현대화, ③ 방공망, ④ 해군현대화 등 총 4개 분야의 가능성이 높다.¹²⁹⁾

(가) 군사정찰위성 발사 및 운용 지원

군사정찰위성은 북한이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관련해 열거한 중심 과업 중 하나다. 김정은은 군사정찰위성을 최우선 국방력강화 정책으로 강조한 바 있고 미사일 운용과 대미 억제력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설정해 왔다.¹³⁰⁾ 또 한편 러시아 정부가 러북 정상회담의 장소로 보스토 니치 우주기지를 선택한 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 문답 과정에서 북한과의 우주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을 볼 때 군사정찰위성 분야는 러북 군사협력의 우선 분야로 볼 수 있다.¹³¹⁾ 러시아를 통해 군사정찰위성의 발사체와 위성체 안정성 개선, 지휘통제소와의 송수신체계, 위성체에 장착하는 광학카메라의 성능 개선, 위성체의 조종 및 운용기술, 다수의 위성을 운용하는 기술, 관련 과학기술자의 교류 등에 대해 기술적 협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증표 중 하나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일 수 있다. 조만간 발사가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최소 5기 이상 올려 운영해야 한다. 개발과 실험, 실제 운용까지 최소 향후 몇 년 간 상당한 공을

129) 홍민, “북러의 군사협력과 외교적 밀착의 전략적 함의,” p. 6.

130)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협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것,” “리병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적대행위로 조선반도 지역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자위력강화립장 표명(전문), 『조선중앙통신』, 2023.5.3.

131) “4년5개월만 재회...푸틴 “北 위성개발 도울 것”... 김정은 “초대감사,” 『연합뉴스』, 2023.9.13.,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3103551096?section=search>> (검색일: 2023.12.26.).

참여야 하는 프로젝트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와 향후 다수의 위성 발사가 러시아의 기술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구도로 간다면, 러북의 전략적 일치가 한층 확고해 진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러시아가 궤도에 올린 군사위성은 총 19개다. 러북이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은 동북아에서 대미 견제를 위한 전략적 일치를 만든다는 의미를 갖는다. 2023년 연말과 2024년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순간이 될 수 있다.

(나) 공군 현대화 지원

북한은 남한에 비해 지상용 핵·미사일이라는 비대칭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 또는 한미 전력에 비해 공군력과 해군력에서 절대적 열세에 있다. 특히 공군력의 경우 작전 반경이 북한 영토 내로 한정될 만큼 열악하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전투기를 비롯한 비행 전력의 성능 업그레이드와 한미의 공중 자산을 요격할 수 있는 대공미사일 능력을 일정 수준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실전 배치한 오래된 4세대급 러시아제 Mig-29를 주력 전투기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4.5세대 또는 5세대급 전투기를 실전 운영하고 있는 한국에 비해 공군력에서는 절대적 열세로 평가받는다. 2023년 9월 김정은이 방러 때 러시아의 최신예 전투기 생산기지를 방문하여 직접 탑승하며 적극성을 보인 것은 그만큼 공군력 향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공군의 경우 제일 급한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Mig-23, Mig-29의 수명 연장과 기능 개선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Mig-29 40기 중 정비 불량, 기체 결함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것은 16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BVR(Beyond Visual Range)과 같은 시계 외 공중전 능력은 부재하다. 북한이 구소련으로부터 Mig-29를 도입했을 때, 소련과 Mig-29의 유지, 보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은 구소련

을 계승한 러시아도 승계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도 꾸준히 북한의 Mig-29는 유지, 보수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조종계기판도 Mig-29smt의 글래스 콕핏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을 공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14년 김정은이 참관한 Mig-29 훈련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보수 유지 이외에 무기체계 업그레이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¹³²⁾

공군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첫째, 전투기 조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앙처리장치(CPU)를 교체하여 용량을 늘리는 개선이 가능하고, 둘째, 전투기에 장착하는 레이더를 보다 고성능으로 교체하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셋째, 조종석에 장착된 아날로그 디스플레이를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교체하는 것을 통해 조종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업그레이드는 가령 Mig-29 동일 기종이지만, 향상된 소프트웨어와 디스플레이 교체를 통해 무장력을 신장시키고 조종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이 202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고고도정찰기, 무인공격기 등과 같이 러북이 전투용 무인기 및 드론에 대한 협력을 통해 이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2023년 김정은 방러 직후 기존의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개편한 것은 러북 간 우주분야 및 공군 기술협력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2) 홍민, “북한정세② 군사·정치 분야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김정은 통치전략,” (통일연구원 2024 한반도 정세전망 기자간담회 자료집, 2023.12.13.), p. 48, <https://www.spnews.co.kr/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12/&savefilename=74294_1522.pdf&filename=2024%20ED%95%9C%EB%B0%98%EB%8F%84%20%EC%A0%95%EC%84%B8%EC%A0%84%EB%A7%9D_%EC%9E%90%EB%A3%8C%EC%A7%91_1213.pdf&idxn o=1522> (검색일: 2024.1.19.).

(다) 대공미사일체계 지원

북한의 전투기 업그레이드나 도입은 운용 시스템 전반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 부담, 장시간의 시스템 안착 및 기술적 정착까지 상당한 투자를 요구한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덜 투여 하면서 빠른 시간 내 공군력 열세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방공망의 현대화이다. 북한은 1970년대 도입한 낙후한 소련제 이외에 <번개-5호>, <번개-6호>와 같이 김정은 집권 이후 개발한 대공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모델은 중국이 개발한 홍치-9(HQ-9)와 외관이 거의 유사하여 역설계나 일부 설계 도입을 통해 모방한 무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의 HQ-9 역시 러시아의 S-300을 모방한 무기체계이다. 2020년 10월 당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번개-5호>의 개량형으로 공개한 <번개-6호>는 2021년 9월 30일에 실험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¹³³⁾ 북한의 대공 미사일체계는 대부분 원천 기술 측면에서 러시아 무기체계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공 미사일체계에서 모방하기 어려웠던 대출력 레이더 및 요격 프로그램을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런 대공 미사일체계에 대한 협력은 북한과 러시아에게 공동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다. 동북아에서 한미일의 공군 및 해군 전력을 억제하는 공동의 이해 부분이다.

(라) 수상함 및 디젤 잠수함 개조 기술 지원

해군력 역시 북한은 한국 및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열세에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러시아 방문 직전 두 차례에 걸쳐 해군력 증강 구상을 밝힌 것은 러북 협력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8월 28일 해군절 축하연설과 9월 7일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함 진수식 연설을 통해 ‘해군무장장비 현대화 계획’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133) “국방과학원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 시험발사 진행,” 『노동신문』, 2021.9.30.

이때 ‘해군의 핵무장화’, ‘핵잠수함 건조계획’을 밝히며 향후 해군이 “국가핵억제력 구성부분”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¹³⁴⁾ 러시아 방문 기간에도 역시 러시아 태평양함대를 방문, 대잠호위함을 직접 둘러 본 바 있다.

이런 일련의 행보를 볼 때 북한은 중장기적인 해군의 현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상함의 신규 건조나 기존 수상함의 개조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핵잠수함 건조계획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직접적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확산 차원의 국제적 비난과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러북 군사협력의 정당성 자체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의 개조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김군옥함 진수식에서 보였던 구조적 불안정성을 개선하거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문제를 기술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수상함과 잠수함을 플랫폼으로 삼고 2023년 실험발사했던 〈해일〉 수중무인무기(핵어뢰), 전략순항미사일(Submarine-Launched Cruise Missile: SLC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등을 장착하여 핵무기 플랫폼을 지상에서 해상으로 확대하는 일환으로 해군의 핵무장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3)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북의 외교적 협력

러북의 협력은 외교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외교적 협력의 내용과 관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텍스트는 최근 러북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보도 내용이다. 2023년 11월 20일 러시아 외교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평양을 방문하여 최선희 북한 외무상

13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에서 하신 축하연설,” 『조선중앙통신』, 2023.9.8.

과 회담 직후 단독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라브로프 장관은 한미일 군사 활동 증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전제조건 없는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정기적인 협상 프로세스 구축 지지, 러북의 지속적인 고위급 접촉 등을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이 회담을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 증진”,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 속 호상지지와 연대”,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이익 고수”, “포괄적이고 전략적 관계 발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정세에서 공동행동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보도했다. 러시아는 주로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반도 평화협상의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면, 북한 보도는 주로 양자 관계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¹³⁵⁾

회담 결과에 대한 양측의 강조점 차이는 양측의 전략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를 ‘안보문제’로 전제하고 이와 관련한 협상 프로세스를 강조한 것은 세 가지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중재자, 해결사 역할을 부각하는 차원이다. 분쟁 지역에 대한 평화협상 중재자의 이미지를 연출하여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연이은 주변국 침공으로 강하게 각인된 호전적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앞서 2023년 10월 17~18일 개최된 시진핑-푸틴 정상회담에서 양측 모두 미국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중재와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 문제를 안보 위협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는 메시지 발신이다. 한반도 문제가 북한의 일방적인 호전성으로 프레임화될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적대적 정책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안전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여기엔 북한과 동일하게 러시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갖는 견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135) 홍민, “북리의 군사협력과 외교적 밀착의 전략적 함의,” p. 8.

수 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한반도의 긴장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원인을 한미일의 강화된 안보협력,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거론하며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북한의 핵개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한미일의 “비건설적이고 위험한 노선”¹³⁶⁾에 원인을 둬으로써 북한 입장에서의 ‘안전’ 관점을 지지하는 한편 이를 통해 러시아의 이해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프레임의 설정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북핵’이 아닌 ‘안전보장’(대북적대정책 철회)의 문제로 보고 있는 북한의 관점이 러시아의 동북아에서 갖는 이익 관점과 동일한 차원의 발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안전보장 차원의 핵군축 추진을 복선으로 깔고 있다는 점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정기적인 협상프로세스’를 언급했다.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하는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과는 다르다. 협상의 성격의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의 제안은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안전보장 차원의 포괄적 대화를 의미한다. 러시아는 최근까지 가장 활발하게 한반도 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해 온 국가였다. 2017년 ‘한반도 긴장완화 3단계 로드맵’을 통해, 적대적 행위 중단, 평화협정 체결, 군비통제(군축)를 각각의 단계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라브로프의 이번 발언은 결국 지금까지 성취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문제 삼기보다는 한국과 북한의 상호 안전보장 차원에서 군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향후 러시아는 러북 밀착 속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다자적 평화협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까지 보인 북한 관련 중국의 입장 표명을 보면, 중국도 이러한 러시아의

136) “러 “북중러, 전제조건 없는 한반도 안보 협상 프로세스 지지,” 『연합뉴스』, 2023.10.19.,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9110200009>> (검색일: 2024.1.26.).

접근방식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런 외교적 메시지는 러북의 무기거래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희석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정당성과 핵무기 보유를 진영 내에서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상호 안전보장과 핵군축으로 프레임화하려는 러북 사이의 암묵적 공조 차원으로 볼 수 있다.

3. 중·러·북 연대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가. 중·러·북의 대미견제의 전술적 협력

북한은 2022년 9~10월부터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이 전개되든 위축되지 않고 맞대응 훈련을 과감하게 실시하고 있다. 항모 로널드 레이건 호, 키웨스트 및 스프링필드 핵잠수함, 상륙함정, 각종 첨단 공중자산이 전개되어도 북한은 맞대응 발사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 2023년에는 모듈화된 핵탄두인 ‘화산-31’을 전격 공개하며 전술핵 실전화와 즉각적 대응을 보여주는데 집요할 정도로 집중하고 있다. 어떤 미국의 무기에도 굴하지 않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호전성은 과거와는 다른 자신감이다.

물론 전술핵무기 개발이 그 자신감의 배경일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시야를 넓히면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안보 차원의 전술적 행보가 그 자신감의 주요 배경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우선 2022년 9월 말에서 10월 초 상황이다.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여한 한미일 해상훈련이 동해 독도 인근에서 실시됐다. 북한은 이 기간 ‘모의 핵탄두 탑재 훈련’ 일환으로 무려 7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중 모험주의적 과감성이 두드러졌던 행동은 10월 4일 일본 열도를 넘기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다.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미일 해상훈련을 마치고 일본 쓰가

루해협을 통과하여 모항인 요코스카항으로 돌아가는 중 그 상공으로 미사일을 쏜 것이다. 2003년 취역한 로널드 레이건호 상공으로 미사일을 쏜 경우는 이번이 유일했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항공모함 상공이나 인근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도 찾기 어려울 듯하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다시 회항, 독도로 전개됐고 한미일 훈련은 하루 연장돼 실시됐다.

이 시기 주목할 부분은 중러 연합훈련이다. 중러는 2022년 9월 초 '보스토크(동방)-2022(9월 1~7일)' 다국적 훈련 때 오오츠크와 동해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이 끝난 이후 10월 초까지 해군 함정을 한반도와 일본 인근에 전개시켰다. 중국 해군 함정은 한국 동해, 일본 아이모리 해협, 대한해협, 오키나와 인근까지, 러시아는 일본 동쪽 태평양까지 작전을 펼쳐 사실상 일본 열도를 포위하는 형세였다. 한미일과 중러의 훈련,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이 오버랩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것이다.

두 번째 상황은 2022년 12월 21~27일 중러가 제주도 서남방, 동중국해에서 '해상연합 2022'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의 상황이다. 러시아의 미사일 순양함, 구축함, 소형 호위함, 러시아 공군의 Tu-95와 중국의 H-6K 폭격기가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공동 순찰 비행까지 했다. 추자도 남방에서 대공 미사일로 함포 사격, 대잠수함 훈련 등을 실시했다. 한미 역시 같은 기간 제주도 서남방 같은 지역에서 RC-135V 리벳 조인스, B-52H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F-35A, F-15K 등을 동원 해당 공역에 대한 공중기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 공군 RC-135 '리벳 조인스' 정찰기를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J-11 전투기가 6m 거리까지 위협 비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바로 이 중러와 한미가 훈련으로 대치하던 기간인 23일 북한은 동해로 단거리탄도 미사일 2발, 26일에는 무인기를 침투시켜 한국을 놀라게 했다.

2023년 3월 28일 미국의 항모 전단 니미츠호가 부산에 입항했고

4월 3~4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대잠수함전과 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3월 말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동해에서 전투기와 전투함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었다, 초음속 미사일 2발을 일본 홋카이도 인근에 쏘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한해협 정보수집함 활동도 활발해졌다. 북한의 과감한 미사일 발사, 전술핵 교리화의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군사훈련들을 북한은 과감함을 보여 줄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러의 연합훈련, 한미(일)의 연합훈련이 교차하는 패턴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패턴의 반복은 중러북이 공식적이고 합의된 연대를 과시하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대미 견제에 있어 서로의 행동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향후 미국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가 대중국 전략경쟁의 강도와 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중국의 전술적 협력이 나타날 가능성도 달라질 것이다.

나. 중·북과 러·북, 양자와 3자의 함수관계

중북 및 러북의 양자관계는 확고한 전략적 일치 단계에 있는 동맹으로 보긴 어렵다. 최근까지 이들 사이에는 미묘한 전략적 이해의 차이가 발견된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적 이해의 차이와 전략적 일치의 필요성 사이에서 이들 관계들은 어떻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까. 우선 중북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공식적인 행사에서 연출된 양국 관계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2023년 7월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1) 러시아 및 중국 축하사절단의 주석단 열병식 참석을 통한 ICBM을 비롯한 전술·전략 미사일 행렬 참관, (2) 러북의 ‘공동전선’,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를 의도적으로 과시한 부분이다. 외형적으로는 중러북의 연대로 비춰질 수 있으나, 러북 및 중북의 밀착에서는 다른 결이 느껴진다.¹³⁷⁾

러시아 축하사절단 관련 보도에서는 “견해일치”,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 “공동전선”, “전략적 단결”, “전략적 우의”, “한전호” 등의 표현을 썼지만, 중국 축하사절단 보도에서는 전통적 우의에 대한 상투적 표현 이외에 이렇다 할 밀착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2023년 7월 27~28 일자 노동신문에서 중국 대표단 동정 사진은 30장인 반면, 러시아 축하사절단 동정 사진은 무려 84장으로 3배 가량 많았다. 이런 보도의 차이는 북한의 일방적 설정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적극성에 비해 중국이 상당 부분 신중한 거리 두기를 한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¹³⁷⁾

중국의 대북한 접근에 있어 보여지는 신중함은 축하사절단 ‘격’에서도 나타난다. 증북이 양국의 기념일과 관련 외교적 사절단을 파견하는 우선순위는 공화국창건일, 당창건일, 전승절 순이다. 2023년 7월 북한의 정전협정 체결일(전승절)은 정주년에 해당하는 70주년 행사로 축하사절단을 보내야 하는 중요 행사로 볼 수 있다. 전승절의 경우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도 연관이 있는 기념일이다. 그럼에도 김정은 집권 이후 보냈던 대표단장 ‘급’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앞선 세 차례 파견 때는 리위안차오(2013.7.27.), 류윈산(劉雲山, 2015.10.10.), 리잔수(2018.9.9.) 등과 같이 국가 부주석,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내 권력 서열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급의 최고지도부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 등이었다. 그러나 이번 리홍중은 25명 정도로 구성된 정치국 위원 중 한 명으로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위상의 인물이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상이 낮은 인물을 보내 일정한 거리 두기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핵·미사일 고도화로 국제사회 주목을 받고

137) 홍민, “북한 정전협정일 70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18, 2023.7.29.), p. 4,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14334&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4. 1.19.).

138) 위의 글, p. 4.

있는 북한, 이것을 명분으로 중국을 포위·압박하는 미국 등을 의식해 중북 간 밀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상징적 참석에 무게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이런 신중함은 최근 미중간 과열된 경쟁구도를 조정하려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단 미국 장관급 고위직들의 방중,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주문하는 미국의 메시지 등을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고위층을 파견하여 중북 밀착을 자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북한을 홀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선에서 상징적 참석 수준으로 인물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¹³⁹⁾

중국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구도에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국제적 리더십 위상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나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입장과 자세로 일관해왔다. 즉 미국의 대북(군사적) 압박이나 대북 위협(대북 선제타격 등)이 있을 경우만 중국은 협력하는 행동 유형을 보였다. 북한 문제는 중국에게 딜레마적 요소가 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협상에서 의제화될 수 있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안전보장, 북미 및 북일 수교, 대북제재 해제, 경제협력 등은 중국의 동북아 전략, 대미전략, 한반도의 군사적 위상 등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문제들이다. 따라서 중국은 논쟁적 의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해법보다는 한반도에서 제기되는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평화를 단계적으로 지향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중국은 2017년 3월 ‘쌍중단(한미연합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추진)’을 한반도 평화해법으로 제안해 왔다. 이 방안은 구도상 북한이 주장하는 안전보장을 중심에 놓는 접근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적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교환하는 구도다. 다시 말해 중국은 자

139) 위의 글, p. 4.

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접근방식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런 중국의 접근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응한 바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역시 완전한 전략적 일치나 동맹 수준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저변에는 여러 갈등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들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러시아의 외교정책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만큼이나 분명히 커졌다. 미국이 양국에 대해 봉쇄조치를 강화한 이후 이들의 파트너십은 더욱 공고해졌다.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대하는 중국의 현명함과 함께 러시아는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주요 군사 하드웨어 및 방위 기술 공급원이 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러시아 제1의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2019년부터는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에 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러시아의 중요한 에너지 시장이 됐다. 금융분야에서도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금융 자원으로 중국 은행 시스템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부상했다.¹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완전한 전략적 일치의 관계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전략적 일치’에 대한 단일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가 대체로 일치하여 다양한 수준의 대화와 정책의 조율이 가능한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중러의 관계는 철저하게 자국 이익에 기반하고 있으며 상호 구속적인 자동 약속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의 이익 관점에서 외교 관계를 설정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국익 중심의 철저한 계산 속에 설정된 중러 관계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미국 중심

140) 홍민, “북한 군사정찰위성, 북러 전략적 일치의 증표,” 『내일신문』, 2023.11.21.,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80235> (검색일: 2024.1.26.).

질서를 변경하여 중국 또는 러시아의 이익이 관철되고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러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즉 미국 중심의 질서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다.

이들의 이런 이해는 단기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 차원의 최상위 목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한편 이와 달리 이들 사이엔 긴장의 여지도 존재한다. 천연가스와 석유 등 자원의 보고인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권을 확보하는 차원의 영향력 경쟁이 이 두 국가 사이의 잠재적 긴장 요소다. 그러나 최근 중러가 밀착하면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쟁은 일정 부분 타협과 공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하나의 긴장은 중러 경제 협력에서 나타나는 러시아의 중국 의존성에서 나타나는 긴장이다. 전쟁과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대유럽 외교에서 양측이 갖는 이해의 차이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질서의 창출을 위해 유럽과의 유대가 절실한 반면, 러시아는 NATO의 동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과의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있다.

이런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이라는 공통의 지향점과 지정학적 긴장 사이에 있는 중러관계가 단기적으로 갖는 강점은 대미 견제라는 공통의 이해에서 구사하는 ‘전략적 협력’이다. 중국과 러시아 각각의 입장에서 유럽, 중동, 동북아는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보면 결코 분리돼 있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지리적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와 실제 인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지정학적 환경은 모두 미국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전력과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미국 외교의 곤경, 미국내 여론 양극화 등을 만들어내는 사안에 있어서 중러는 빠른 전략적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동북아 전략의 핵심은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양국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창출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권과 행동

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서 전략적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중러 간 ‘신실 크로드’ 주요 광산 프로젝트, 대규모 천연가스 액화 시설 및 유라시아 고속철도 건설계획, 도로-철도 교량 연결 등과 2012년 이후 45회에 달하는 연합군사훈련이 그 대미 탄력적 대응의 산물이다. 중러관계는 중국식 외교적 어법을 빌리면, 수망상조(守望相助)라고 할 수 있다.¹⁴¹⁾ 공통의 적이나 어려움에 대비해 서로 망을 봐주고 돕는 관계를 뜻한다. 주권, 안보, 발전이익 등 핵심 문제에서 상호 명확하고 강력한 지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¹⁴²⁾

141) “G7 신경 쓰이는 중국 “중양아시아와 운명공동체,” 『경향신문』, 2023.5.21., <<https://m.khan.co.kr/world/china/article/202305212142015#c2b>> (검색일: 2024.1.30.).

142) 홍민, “북한 군사정찰위성, 북러 전략적 일치의 증표.”

The background features a series of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Two large, stylized circular shapes are present: one on the left side, partially cut off, and another at the bottom right. Both circles are filled with a grid of small dots, with the density of the dots increasing towards the center of each circle.

V. 결론: 중·러·북 연대 전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

이재영 · 홍민 · 현승수 (통일연구원)

중러북 연대에서 연대의 공고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인은 중국의 적극성과 중러 및 러북(군사협력) 연대 요인이다. 왜냐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북 관계는 전략적 이해가 유사해지면서 중러북 연대를 반미 연대로 끌고 가려는 동기가 강하지만, 중국은 노골적인 반미 연대는 꺼리면서 중러 연대 역시 반미 연대보다 다극화와 다자주의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러관계는 정략 결혼에 비유되면서 반미 연대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 이후 연대가 느슨해지고, 두 나라의 군사협력은 상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두 나라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평등한 파트너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상호 불신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서방에서는 지배적이다. 그리고 유럽에 대한 입장이 중국과 러시아는 다르다. 반미 연대와 미국에 대항하는 질서 구축을 위해 중국은 유럽과의 유대가 절실하지만, 러시아는 NATO의 동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과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러시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즉 중러관계가 성숙함, 안정성, 깊은 상호 신뢰와 존중, 서로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한 배려와 상호 지원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러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러북 연대의 공고화는 중국의 태도 변화와 중러 연대의 강화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적 일치와 단기적 이해 차원에서 중러북 연대 속 러북 군사협력의 중요성이다. 우선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욕망의 팽창이 지속되는 한 러북 밀착은 중장기적인 전략적 일치로 갈 것이고, 그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과 한미일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러북 간 군사 정찰위성을 비롯한 우주개발 협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 이해 차원에서 러북 군사협력은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의 전환점을 앞두고, 유럽 전선과 동북아 전선을 연계하는 대미 견제 협력을 통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군사협력을 통해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받는 진영 내 승인 효과도 거두는 것이다. 러북의 군사 무기 협력 분야는 구체적으로 우주개발(군사 정찰위성 개발), 공군현대화(공군 전투기 업그레이드), 방공망(대출력 레이더 및 요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군현대화(디젤 잠수함의 개조와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의 기술 지원)의 총 4개 분야를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중러북 연대는 한미일 연대의 영향도 받는다. 예를 들어 한미일 연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도로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재편이 확대된다면, 중러북의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제약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즉 중국이 중러북 안보 연대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가장 큰 이유가 한미일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 때문인데 만약 한미일이 탈중국, 디리스킹,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으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과의 경제무역과 공급망협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게 되고 중러북이 그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다른 경제적 대안을 찾은 후에는 한미일과의 경제 관계를 의식해 중러북 안보 연대에 소극적일 이유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분석 결과를 통해 중러북 연대를 전망하면, 중러북 연대는 중국의 외교 전략과 중러관계 요인, 북한 도발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선 당분간 중러북 연대의 형태는 중국이 러시아와의 대국 외교 중심으로 외교 군사 관계를 주도하고, 한반도 주변국 외교를 통해 대국 외교를 보완하는 이원화 전략에 따라 형성된다. 따라서 중러북 연대는 한미일의 압박과 대만 문제와 같은 핵심이익 개입의 정도에 따라 이원화 전략에서 두 외교를 더 긴밀하게 연계시킬지 아니면 분리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러북은 한미일과 다르게 경제적 상호의존도에서 시혜적 관계를 중심으로 중러의 북한 체제 지원과 역사 전쟁을 통해 반미 연대의 정체성을

공고화한다. 한미일의 탈중국과 디리스킹 공급망 재편 전략의 강화 정도와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중국의 러북과의 연대 동기도 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다양한 도발이 중러에 전략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중러의 북한 도발에 대한 두둔 공조 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러북 연대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 가운데 대중국 전략, 대러시아 전략, 대북한 전략의 핵심은 한미일 연대와 한일중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포용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인 예로 경제안보 협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대북 제재 무력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동아시아의 공동 평화번영을 추구한다는 사실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여 중러북 연대를 주도할 수 있는 양국의 연대 동기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의 강화에 중국이 경제적 강압 조치로 맞서는 것에 대한 사전 파악 및 모니터링과 함께 선제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일중 협의체 속에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협력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중러북 연대에 대한 중국의 적극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보편가치와 국제법에 근거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응하되 민간과 1.5 트랙 차원 소통과 교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할 때 한미일 차원보다는 보편가치와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미일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면 중러는 이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중러북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고 이는 신냉전 진영화를 고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이러한 신냉전 구도는 한국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중러북 연대 차단을 위한 한국의 대중국/대러시아/대북한 전략을 도출한다.

1. 중·러·북 연대 차단을 위한 한국의 대중국 전략(이재영)

한미일 경제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제재 무력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 관련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대한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한미일 공급망협력은 사이버 안보와 금융 질서 분야 등 공급망 급소 영역 제재의 그물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중러북 경제 블록화를 통해 음성적·점진적으로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¹⁴³⁾

한국은 한미일 협력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사실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국에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한국은 한미일 협력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핵 위협을 억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고,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보다 북한 정권 생존을 더 우선시하기에 한미일 협력으로 손실을 보는 것이라고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한미일 협력과 궤를 같이하면 한중 모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사실로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레드라인을 넘을 때 언제든지 경제적 강압 조치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국에 알리고 한국이

143) 이재영, “미중 공급망 경쟁 속 북·중·러 경제블록화 및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전략,”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24, 2023.8.25.),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14382&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3.10.26.).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한중, 일중 간 경제무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회피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을 위협할 때 명확히 제시한 레드라인(대만 문제 개입)을 넘지 않는 데까지만 행동하기보다, 그 이전 수준에서 적당히 멈추기를 바란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한국 역시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뿐 아니라 대만독립 역시 현상 변경이라는 사실을 중국에게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과 한일협력에서 언급한 '대만 해협에서의 현상 변경 반대'에 관한 내용이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국에 설득할 필요도 있다. 대만해협의 평화는 해양 수송로 등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단계별 중국의 반응을 사전에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강압 조치에 대한 사전 파악과 한미일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문제와 한반도 문제는 의도하지는 않지만 연결된 위기로 볼 수 있다. 즉 중국이 이를 의도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나, 중국이 대만해협을 봉쇄하고 군사 행동을 하게 된다면 북한이 이를 틈 타 연쇄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원하고 이러한 위기의 연쇄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북한 도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도발을 두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촉구해야 한다. 대만해협과 한반도 위기의 연계가 의도적·계획적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합리적 안보를 중국이 계속 두둔한다면 두 위기가 구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는 강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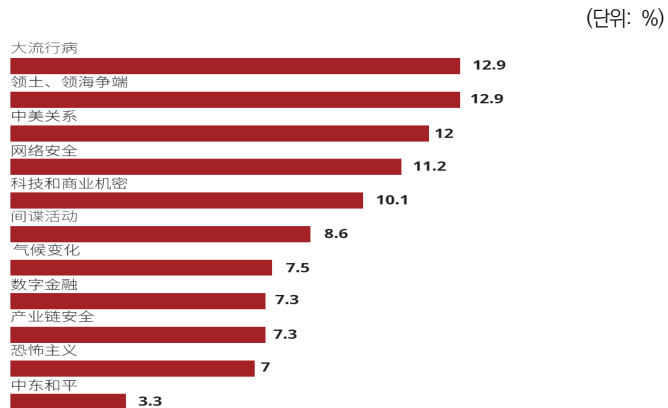
그리고 한일중 협력을 통해 중국을 러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전략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미일 3국 간 협력 혹은 대만과 남중국해

사안에 대한 한·일과 중국 사이 이견과 한일중 3국 협력 메커니즘을 지나치게 연계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체된 3국 간 협의체 적극 가동, 국민 체감 가능한 실질 협력 사업 발굴, 역내 안정과 번영 기여 협력 저변 확대 등에 집중해야 한다.

다른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수교 중재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의 외교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순회 의장인 중국이 중동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한반도 정세 악화에 대해 중국이 중동의 평화보다 더욱 우선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V-1>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이 우선 시급히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에 있는 국제 안보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약 10~12%의 비중으로 팬데믹, 대만과 남중국해와 같은 영토 및 영해 갈등, 미중 관계, 인터넷 안전, 과학기술과 상업 기밀이 중시되었다.

<그림 V-1> 2023년 칭화대 여론조사 『중국인의 국제안보관(中国人的国际安全观)』 보고서 중 아래의 문제 중 중국이 우선 처리해야 할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응답



출처: 清华大学战略与安全研究中心, “中国人的国际安全观”民意调查报告.”

즉 중국이 가장 우선시하는 3대 국제 안보 문제는 팬데믹, 영토문제, 미중 관계인 반면, 우선순위가 비교적 낮은 이슈는 중동평화(3%), 테러리즘(7%) 등이었다. 한반도 문제와 북핵 이슈가 위 설문 조사 문항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전반적인 중국의 시각에서 동 사안이 주요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⁴⁴⁾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미중 관계만큼 우선시하고 중동평화와 테러리즘보다 더 중시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해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러북 반미 연대를 주도하는 것을 저지하고, ‘제재 준수, 북한 도발 억제, 북한의 대화 참여 유도’ 같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하되, 중국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핵화 해법 관련 한중의 가장 큰 입장 차이는 한국은 선 비핵화를 원하고, 중국은 이에 반대하며, 또한 한국은 제재 및 압박을 우선시하는 반면, 중국은 제재 및 압박보다 대화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북핵 위협은 우리의 실존적 위협이지만 중국은 이러한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역할 발휘 전제는 미국의 태도 변화지만 중국 역할에 대한 한국의 기대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중국의 대북 압박과 회유이다. 한국은 선 비핵화의 문제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핵 보유 지위를 공고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중국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한중은 제재, 압박, 대화가 모두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우선 형성하고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전략 소통을 활성화하여 현 한반도 정세 속에서 비핵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식에 대한 한중의 우선순위 합의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144) 김한권, “통일연구원 2023년도 수시 과제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전략 최종보고회 토론문.”

2. 중·러·북 연대 차단을 위한 한국의 대러시아 전략 (현승수)

중러북 연대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외정책 노선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였으며, 다극적 세계질서 실현, 서방과의 문명적 단절, 미국과의 타협 없는 대결, 반미 성향 국가 및 유지(有志) 국가들을 결속한 글로벌 반미 연대의 확장 및 구축 등의 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일환으로 러시아는 중국 및 북한과의 전략적 밀착 강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현 단계에서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정책결정자 레벨에서 중러북 연대의 구체화나 제도화에 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추이가 러시아 측에 불리하게 전개되거나, 미·서방과의 관계가 현 수준보다 더욱 악화할 경우, 또 미중 경쟁 국면 속에서 중국의 선택에 따라 러시아는 중러북 연대를 본격적으로 시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러북 관계는 북한의 결기보다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도 있고 하향 곡선을 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자체가 러시아 지정학에서 갖는 완충지대로서의 중요성은 불변한바, 한러 관계 개선이 러북 밀착의 추동력을 약화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러북 군사 협력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와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이완 가능성 등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교 이후 30년 이상 지속돼 오던 한러 협력의 토대는 사실상 와해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 종결될지는 미지수이나, 한러 관계가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다극화 세계 질서의 실현을 국가 대외 전략의 지상과제로 설정한 푸틴의 러시아가 미·서방과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 전통적으로 한러 관계는 미리 관계에 연동해 왔다는 사실도 한러 관계의 미래를 어렵게 한다. 미리 관계의 개선 없이는 한러 관계 역시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도발과 폭거에 대해서는 보편가치와 국제법에 근거해 비판하고 대응은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방침을 견지 하되, 지나친 대러 적대감 표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러 관계의 조속한 회복은 어렵더라도 한국은 러시아와 대화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민간과 1.5 트랙 차원의 소통 및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러시아 관·학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하는 담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대북 관계 강화도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동아시아판 NATO' 계획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경계하며, 중국 역시 인식을 같이 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과 함께 중국의 공동 대응을 끊임없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러북 결속과 연대를 강화하는 추동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신냉전'을 추동하기보다 도발 억지와 분쟁 방지, 평화 여건 조성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이를 러시아 및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3. 중·러·북 연대 차단을 위한 한국의 대북 전략과 대중국/러시아 외교(홍민)

북한의 진영화 구도에 편승하는 반미전선 프레임을 무력화하는 한반도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대외적으로 재천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차기 미국 행정부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역적인 핵무기 고도화 천명, 러북 및 중북 지렛대로 한 대북제재의 무력화, 한미일 대 중러북의 진영화 논리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가 진영 구도와 무관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의 문제임을 부각시켜 반미코드에 입각한 북한 접근 논리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한반도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중국 및 러시아의 책임 있는 건설적 기여와 역할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중요 계기에 대통령 발언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핵 문제의 협력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선언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북한 비핵화 원칙을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 차원에서 적극화하고 북한 비핵화를 저해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중관계의 전환적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협력을 끌어내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해 온 한일중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한중 사이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한중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중국 협력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로 인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이것이 대중국 압박으로 이중용도화되고 있다고 보고 북한의 행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한반도 긴장 조성이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책임적 지위를 위협하는 문제임을 인식시키는 적극적 외교 메시지가 전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박정호·강부균·현승수·제성훈. 『미·중·러 전략경쟁 시기 러시아의 대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이정균·김범환. 『‘북·러 관계’ 70주년 평가와 전망』.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조명철.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동호 외.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22.

현승수·이우태·이재영·김규륜·이현태. 『중·러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서울: 통일연구원, 2020.

홍민·이재영·황수환·김영준·정옥식.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 안전보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23.

홍민·조한범·박인휘.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7.

Groitzl, Gerlinde. *Russia, China and the revisionist assault on the western liberal international order*. Cham: Palgrave Macmillan, 2023.

Loftus, Suzanne. *Russia, China and the West in the Post-Cold War Era: The Limits of Liberal Universalism*. Cham: Palgrave Macmillan, 2023.

Lubina, Michal. *Russia and China: A political marriage of - stable and successful*. Toronto: Barbara Budrich, 2017.

Stallard, Katie. *Dancing on Bones: History and Power in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2. 기타

『경향신문』, 『내일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통일뉴스』, 『한겨레』, 『KBS뉴스』.

bloomberg,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Foreign Affairs, South China Morning Post, The Wall Street Journal, USNI News, Washington Post.

NIKKEI Asia.

『明報新闻网』, 『环球时报』, 『新华网』, 『央广军事』, 『中国新闻网』.

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Ветеранские вести, ИМЭ МО РАН, Москва 24,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РБК, РИА Новости, ТАСС, expert.ru, INTERFAX.RU, riato.ru.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www.inss.re.kr>.

세종연구소 <www.sejong.org>.

외교안보연구소 <www.ifans.go.kr>.

통일연구원 <www.kinu.or.kr>.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www.emerics.org>.

KITA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KOTRA <www.kotra.or.k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ww.carnegiemoscow.org>.

Center for Strategic&International(CSIS) <www.csis.org>.

The James Town Foundation <www.jamestown.org>.

U.S. Department of Defense <www.defense.gov>.

日本 防衛省 <www.mod.go.jp>.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网站 <www.mfa.gov.cn>.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www.gov.cn>.

清华大学战略与安全研究中心 <www.ciss.tsinghua.edu.cn>.

Валдай <www.ru.valdaiclub.com>.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www.archive.mid.ru>.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www.kremlin.ru>.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РСМД) <www.russiancouncil.ru>.

홍민. “신냉전 기회삼아, 안전보장 모색하는 북한.” 『통일시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vol. 156, 2019.

____. “국제질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북한의 국가전략.”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2023.

____. “북한정세② 군사·정치 분야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김정은 통치전략.” 통일연구원 2024 한반도 정세전망 기자간담회 자료집, 2023.

CRS. Russia’s War in Ukraine: Military and Intelligence Aspects, 2023.

김한권. “통일연구원 2023년도 수시 과제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최종보고회 토론문,” 2023.

엄구호. “러시아가 바라보는 북중러 연대 가능성.” 통일연구원 서면 자문, 2023.

이상숙. “북한과 중국이 바라보는 중러북 연대 가능성.” 통일연구원 서면 자

문, 2023.

통일연구원-중국국제문제연구원 좌담회, 2023.9.

통일연구원-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전략대화, 2023.12.

통일연구원-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전략대화, 2023.9.

통일연구원-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좌담회, 2023.9.

“Страна, живущая в трёх эпохах: к 75-летию КНДР.”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2023. 재인용: 현승수.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30, 2023.

Taylor, Adam. “How Russia Learned From Mistakes to Slow Ukraine’s Counteroffensive.” *Washington Post*, 2023.9.8., 재인용: 흥민. “북리의 군사협력과 외교적 밀착의 전략적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35, 2023.

Yun Sun. China’s Strategic Assessment of Russia: More Complicated than You Think. War on the Rocks.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 March 4, 2022. 재인용: 이기동·최용환. “한미일 대 중러북의 연대 수준 비교 및 시사점.” 『INSS 전략보고』, December 2023. No. 242, 2023.

연구보고서

2021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환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곤 외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운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김석진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황진태·백일순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태연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 Study Series ■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Choon Geun Lee·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2022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외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석진·홍제환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이지순·최선경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빈 외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나용우 외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2-08	북한의 중산층	정은미 외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태은·박동준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황수환·권재범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현승수 외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조한범 외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김상기 외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이무철 외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장철운 외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정성윤 외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옥 외
2022-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이재영 외
2022-19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2-20	KINU 통일외식조사 2022	박주화 외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황진태 외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외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최지영 외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홍제한 외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김갑식 외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박영자 외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22-01	중국 20차 당 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전병곤 외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한동호 외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홍 민 외

■ Study Series ■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Hyeong-Jung Park et al.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Ji Sun Yee et al.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Eun Joo Park et al.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2023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23-01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황진태
2023-02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김석진
2023-0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3-04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정은이 · 이해정
2023-05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김갑식 외
2023-06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장철운 외
2023-07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23-08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이무철 외
2023-09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현승수 외
2023-10	KINU 통일외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문	이상신 외
2023-11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나용우 외
2023-12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나용우 · 이우태
2023-13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최규빈 외
2023-14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이지순 외
2023-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이재영 외
2023-16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정성윤 · 김민성
2023-1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최지영 외
2023-18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은미 · 박희진
2023-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조정아 외
2023-20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박형중 외
2023-21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조정아 외
2023-22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박영자 외
2023-23	일본 기사다 정부의 대외전략	이기태 외
2023-24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황수환 외
2023-25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외
2023-26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홍 민 외
2023-2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홍 민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23-0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오경섭 외
2023-02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정성윤 외
2023-03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동호 외
2023-04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재영 외

■ Study Series ■

2023-01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iscal and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Ji Young Choi et al.
2023-02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to North Korea	Soohwan Hwang et al.
2023-03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ng-Yoon Chung et al.
2023-04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	Min Hong et al.
2023-05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mplementing Government Tasks	Dong-ho Han

KINU Insight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2020-03	미국의 對적성국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외
2022-02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2	이우태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이우태 외

연례정세보고서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2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3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1 (2021)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2 (2021)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1 (2022)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2 (2022)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2 (2023)

기 타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옹혜민 엮음

2022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욕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홍민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위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 갱신 시 보유기간은 1년 연장)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5.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업체(수탁업체)	업무내용
(주) 코리아디엠	발간물 발송 업무 처리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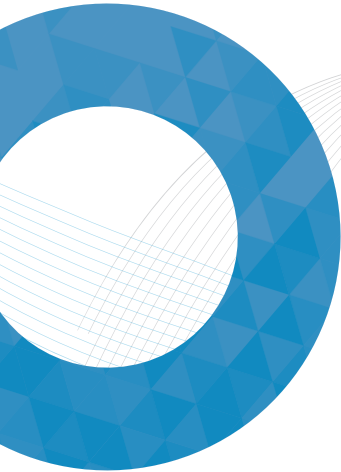
20 년 월 일 성 명 (인)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